

제42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0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상정된 안건

- | | |
|---|----|
|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 2 |
| o 소위원장(조인철) 인사 | 3 |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
|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10 |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나. 방송통신위원회 | |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
| 라. 우주항공청 | |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10 |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나. 우주항공청 | |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우리 위원회로 사보임돼서 들어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6일 자로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이주희 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방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이주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이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현 간사님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여야의 선배 위원님들께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하면서 옳은 방향을, 방안을 도출했으면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향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언제……

○**위원장 최민희** 이것하고 드릴게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오늘 빨리 선출해야 지금부터 임기가 시작되세요. 그래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소위원장이신 정동영 위원께서 통일부장관으로 가짐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과 소위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으며 조인철 위원을 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 소위원장으로 선임·선출하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 위원을 사보임하고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조인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영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김우영 위원** 예.

○**최형두 위원** 그러면 조인철 위원님은 법안소위는 계속 1소위? 법안소위는 그대로 합니까?

○**조인철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 간사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형두 간사님께서 간사님께 조인철 위원님이 법안소위 위원……

○**김현 위원** 1소위 위원.

○**위원장 최민희** 그건 계속하는 것이냐?

○**김현 위원** 그건 추후에 논의해서……

○**위원장 최민희** 추후에 논의하자?

○**김현 위원** 혹시 야당에서도 조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조인철 위원님이 계셔야 우리 과학기술법안소위가 잘되는 데……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의 법안소위 건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사보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간사들께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예, 협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조인철) 인사

(10시12분)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소위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초선으로서는 아마 드문 일일 것 같은데 이런 막중한 소임을 주셔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불편부당하게, 절대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결산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건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야 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김현 간사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위원** 하시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두 분 먼저 하겠습니다, 2분.

○**노종면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건이 2건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붙여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순서를……

○**위원장 최민희** 아예 붙여서 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붙여서 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최대한 요약적으로 하시고 2분이 지나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30일 YTN 청문회에서 그때 출석했던 유진그룹 계열사인 천안기업의 대표 김진구 씨가 의혹이 많았던 천안기업 임대사업 자료, 이게 YTN을 경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다투는 그런 과정에서 유진그룹의 계열사인 천안기업, 그리고 이 천안기업은 아시다시피 현재도 유진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개인적인, 개인 기업이었습니다. 그 천안기업이 회사의 보증 등 지원을 받아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고 또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유진그룹 본사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특혜가 분명해 보이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기업의 임대사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출석했던 김진구 천안기업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형제 등이 개인적인 자금 2억 원으로 만든 기업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분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지분은 유진그룹에서 매입을 해 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지분 전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유진기업이 사들였는데 이전에 있었던 지분매입, 그 매각대금 빼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두 형제의 매각대금이 무려 24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챙겨 간 돈이 149억 원입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안기업을 유진그룹이 어떻게 키워 냈는지,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기업의 임대사업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과기부장관님도 계시고 3차관님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책국 장님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 14일 장관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3년도

에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께서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 자로 서면답변이 왔는데 추후 보고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7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3차관이 직접 회관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과기부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안 온다, 만다 이런 경위 설명도 없이 방문 자체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도 약 2주가 지난 뒤 8월 11일에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장이 곧 방문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3차관이 오신다더니 안 왔고 국장이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8월 14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신 설명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책감사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이 무렵에 있었던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과도한 감사·수사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이날 하셨던 지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보고나 과장·왜곡·조작보고·보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달라’, 이게 안 해도 되는 감사를 억지로 만들고 감사 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막으라는 거지요.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덮어 줘라, 은폐하라,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 이하 해당 공직자들은 지금 당장 자리를 비우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책임을 지고 중간에 했던 대통령실 책임, 대통령실에다가 평계를 대고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멋대로 해석해서 국회가 했던 활동 또 그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 역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천안기업 임대사업 자료 건 이것은 지난번 김진구 증인이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실……

전문위원님, 이 자료 좀 받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즉시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일단 3차관,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방문했고요. 이 TF……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방문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을 못했습니다, 아직.

○위원장 최민희 두 번째 방문을 못 했는데 약속하고 안 가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날짜를 약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방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7월 22일, 23일에 오셨다고요?

○위원장 최민희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가 별로 이슈가 될 것은 아닌데, 약속했으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TF 구성하는 것 인데요. 그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우리 국장님이 8월 14일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그 설명……

○**위원장 최민희** 8월 14일 날 방문하신 국장님 와 계신가요? 앞으로……

이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감사가 폐지돼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 있나요, 방문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장 최민희** 검토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대개 관료들이 안 한다는 뜻을 그렇게 돌려서 해 온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하셨어요? 신중한 검토하셨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노종면 의원님실의 보좌관님께 말씀드려서 그 상황이 이렇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 이후에 하셨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3차관께서는 TF의 필요성 공감한다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신중한 검토의 결과가 TF는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TF 구성은 하도록 하지요.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노종면 위원** 예,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약속받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책감사 폐지는 공무원이 그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정당하게 정책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지, 예를 들면 잘못된 R&D 예산 축소를 잘했다고 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못 봤고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왜 잘못됐는지, 과기부는 무얼 했는지 확인해 보자 이것을 반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된 걸로 봅니다. TF 구성하시고 위원장실에서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의원실과 연계해서.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아까……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독임제 발언을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없다라고 여러 차례, 한 다서여섯 차례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독임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했고 6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 3법 관련해서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발언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준비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만약에 준비된 발언이 있다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발언록을……

○**위원장 최민희** 보고한 자료? 말씀?

○**김현 위원**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기 방통위원장이 만들어진 2008년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방통위 기관장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지 고발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의 경우는 제삼자가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진숙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와 협의해서 진행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국무회의 말씀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나중에 김현 의원실에……

지금 사무처장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예,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발인지 고소인지 등등 간단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김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오늘 2025년 하반기 가을 국회를 사실상 시작하는 셈인데, 또 오늘 중요한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도 선출하고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결산 상정하는 게 주요 업무고 지난번 결산을 좀 잘하고 또 과방위 새로운 예산을 짜자는 게 주 핵심인데.

위원장님, 오늘 결산 상정 이외에 다른 무슨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현안질의를 계속하실 건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현안질의 있습니다. 있으신 위원님들만 하시면 됩니다.

○**최형두 위원** 현안질의인데 오늘 아마 보니까 자칫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소·고발 건이 주요 쟁점이 혹시 되는 것인지……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최형두 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요.

○최형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나중에 별도로 고소·고발……

○김현 위원 정쟁으로 삼지 마십시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5개 중에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너무 방송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도 일반적으로 통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 위원 중에 가장 발언을 많이 한 기록이, 국회의 공식 기록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그 발언 내용도 저도 부끄러운 것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5개 주제 중에 골고루 된 것이 아니라 방송만으로 오로지 이루어진 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 AI 쪽 많은 분야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주로 결산심사 상정안하고 관련된 현안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김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무처장이 김현 의원실에 자료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별거 아니고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국회에 고소·고발 전이 누가 하든 그게 한두 개입니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SKT 청문회 했어요. 그리고 그날 SKT 유영상 사장이 해킹 사태에 따라서 번호이동 위약금을 물면 500만 명이 이탈해서 7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약금 면제를 하고 7월 14일 날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가 번호이동을 했고 위약금 면제에 들어간 돈은 1인당 10만 원 해서 700억이 들어갔어요. 7조 원 대 700억, 100배의 차이가 났어요. 저는 이것 국회에 와서 대국민 사기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발언을 하고 기사가 쏟아졌어요. SK 7조 원 손실, SK 망하게 생겼다, 언론플레이 같고.

국회에 와서 SKT 사장이 저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가입자를 협박하고 그리고 국회를 능멸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SKT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에 와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 그거는 위약금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민희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세요.

マイク 韶和 お仕事お仕事。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위약금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빠져나가서 고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까지 합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500만 명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과도하게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 하겠습니까? 7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 70만 명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의 손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가입자들을 다시 한번 유치를 하고 이런 데 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드립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국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민희** 또 드리세요. 잠시만요, 추가 1분 드리세요.

또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이훈기 위원** 저는 국회에 와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지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와서 ……

500만 명에 7조 원 손실이라고 그러면 국민 누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도 부담이 되지요. 가입자나 국민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기사가 쏟아져 내렸어요. 청문회를 하는 중에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SKT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국회의 권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문회는 뭐가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2분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저는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장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SK에서 위약금을 받지 말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약관대로 해지를 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그것은 같은 의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그게 7조 원이나 되겠냐 이렇게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SKT 사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객이 빠져나가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과장되게 보도된 것도 저도 SKT가 국민 불안을 조장했고 이게 마치 해자는 안 되는 일처럼 포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SKT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위증으로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을 하는 형태로 가다 보면 국회가 기업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상임위에서 고발을 많이 했어요. 그게 국민적인 갈등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충분히 그분들이 와서 사과를 할 기회는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증 고발까지 가는 것은 국회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

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간사께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우주항공청

(10시33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등 AI·디지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AI 기본법 제정 등 AI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 전략 등 연구개발 시스템의 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젊은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도입하였으며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수출의 대형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3만 원대 요금제 신설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촉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스팸 근절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로 디지털 민생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분야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3137억 원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세입은 12조 8405억 원으로 일반회계 3514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946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12조 394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6조 1629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 7952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1조 5752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6조 7925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12조 3372억 원 대비 98.3%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은 2조 1508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932억 원, 원자력기금 1710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042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9824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한 2조 1524억 원 대비 99.9%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노트북에 첨부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2024회계연도 방통위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 및 불공정행위 점검·시정,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중소방송, EBS 교육방송 등에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국민의 미디어 이해 활용 교육 등 시청자 권리 보호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송수신기, 텔레비전을 보급하고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을 통한 국민들의 재난 피해 예방과 대응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는 총 81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48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480억 원으로 예산 대비 97.4%를 집행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실적은 2005억 원으로 계획 대비 99.7%를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의 운영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법령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신규 규제 수요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하여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후 건설허가를 결정하였고 계속운전이 신청된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와 관련해서는 SMR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새로운 설계 특성이 반영된 사업자의 기술보고서에 대해 규제기관의 중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SMR 규제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방사능 방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방사능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2년에 완공된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이어서 한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올해 개소하였고 한빛 지역의 지휘센터도 본격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을 IAEA와 함께 모니터링하여 당초 계획과 부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방사능 감시 정점을 확대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등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입 실적은 3356억 원으로 당초 정수결정액 3358억 원의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 및 여유자금 운용액을 합친 총세출 실적은 4678억 원으로 총예산현액 4791억 원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1344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1360억 원 대비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3334억 원으로 계획현액 3431억 원 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거너번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인 공무원 조직 모델 구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우주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미국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COSPAR 2024를 개최하는 등 개청 초기부터 국내외 국제협력 무대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경제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5년 우주항공 R&D 1조 원 달성을, 뉴스페이스 펀드 2호 결성 등 민간의 혁신을 견인하는 정부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출범을 선언하고 우주산업 진흥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넷째, 우주항공 인재 육성 및 문화 융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월 27일을 국가 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고 우주항공 문화 확산 및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와 다양한 소통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실적은 26억 원으로 정수결정액 26억 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세출 실적은 7362억 원이며 총예산현액 7598억 원 대비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출 실적은 730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540억 원 대비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 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58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및 8개의 특별회계 중 기획조정실, 제2차관 소관 사업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첫째, 총액대상 인건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71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청년인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액대상 인건비를 일용임금 등 운영경비로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은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23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연구과제의 평가 및 정산을 담당하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과 평가와 정산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품 사후관리시험 등 사업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제품 시험 및 현장 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부적합 기기 유통방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한 자기 적합 확인 방식의 적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부는 대상 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은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대비 세출 재원을 충당한 후에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예산액 9207억 7500만 원 중에 3300억 원이 실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탁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측치의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집행 가능한 예탁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소프트웨어인재키움 사업은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등 예비 실무 인력을 대상으로 AI·소프트웨어 집중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3억 원 중 1억 5800만 원이 실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초기에 그 추진이 중단된 사례로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사업은 정보보호·ICT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고성능 컴퓨팅 신뢰성 확보, 융합 콘텐츠 및 메타버스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10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에서 기금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 사업관리 시스템에 미등록되거나 정산보고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사업은 ICT 연구개발 기획, 사업 관리, 성과 관리 등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7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규모 계약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수행 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물인터넷산업육성선도 사업은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제품·서비스 개발 인프라 제공, 시장 진출 지원 등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13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으로 지원한 ICT 디바이스 판교 FAB에 구축된 장비별로 가동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요가 적은 장비를 처분하고 신규장비를 도입하는 등 실수요 위주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 제작을 위하여 투자의 제한이 없는 민간 중심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3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축소·변경하였고 2024년도에 완료되었어야 할 펀드는 현재까지 조성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에 사업의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방통위 소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총액대상)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 217억 4000만 원 중에 21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 등을 통해서 충당하였는데 해당 인건비 소요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소요로 보입니다. 이를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사후에 전용 등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계획액 58억 4200만 원 중에 5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악방송은 동 사업 보조금을 등산이나 지역여행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인 상업방송에서 소외된 국악 관련 방송편성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 복지 실현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목적 범위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과기부1차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사항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출연연에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87%가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연구자의 창업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술료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 지분 기술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10% 이상을 성과 활용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70% 이상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성과 확산의 실질적 기여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되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연구개발활동비 등으로 잘못 편성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중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사업은 과기부·해수부·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이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과기부 소관 예산도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부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입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동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한 후 공모를 통해서 포항공대에 위탁·수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우회적인 위탁 방식은 책임 분산과 관리 감독 한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형 가속기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연구실안전환경구축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생명과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맡아서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연구시설장비 활용 촉진 사업은 활용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민간기관 등에게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고 시기를 앞당기는 등 유휴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위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양환경시료 분석 장비인 대형회화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불연소와 악취 문제가 불거져 이를 다른 장비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납품 지연과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장비 도입 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종사자 방호기록 및 규제정보 관리·분석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에 항공기 승무원의 방호정보에 대한 관리와 분석을 원자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게 조정하였으므로 향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끌으로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현안질의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가능하면 결산에 집중하시되 현안질의까지 같이하셔도 좋습니다.

○**박정훈 위원** 잠깐만요. 원래 듣기로는 우리가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까지 같이하도록 애초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현안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2026년 8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1년 좀 더 남았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임기 마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까지입니다.

○**박정훈 위원** 마치신다는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임기하고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수 여당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걸 막을 능력과 권한은 없으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법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것이 법치가 될 것입니다.

○**박정훈 위원**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대체법안 그것 보셨어요, 내용?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봤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드린 대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틀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그 법을 왜 발의했다고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설명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본인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을.....

○**박정훈 위원** 특정인이 본인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 임기가 지금 1년 남았는데 그 전에 자르려고 이 법 발의 한 걸로 본다 이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박정훈 위원** 그 바람에 민생 현안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됐지만,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용자, 시민 불안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조치가 완비되려면 상임위원회 5인 구성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박정훈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5인 구성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훈 위원 5인 체제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적어도 1명이 더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을 더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아까 김현 위원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고발하신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을 고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뭘 모욕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박정훈 위원 그것 기사가 많이 됐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저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의미가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고 지난 6월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발언을 해서…… 그 외에도 ‘헛짓거리’라든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고……

○박정훈 위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일반 방송에서도 했다, 그래서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그런 발언들에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지상파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발언의 무게가 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욕감 인지감 수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박정훈 위원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임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당시 많은 우리 여당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방송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인데 지금 왜 이렇게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법도 발의를 하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정훈 위원 법인카드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

라서 사적인.....

○**박정훈 위원** 사적으로 이용한 것 없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사적인 용도가 전혀 없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에서 한 것 같던데 수사가 실제로 늦게 진행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을 제가 고발한 것도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을 행안위에 불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왜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강압적으로 질문을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이 ‘신속히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성실.....

○**박정훈 위원** 수사가 늦지 않게 되고 있다, 본인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범인카드 많이 썼던 김혜경 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명현 씨 같은 내부고발자도 없고 제가 집으로 초밥을 시켜서 먹은 증거도 없고 제가 과일을 사 먹은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업무 용도로만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업무용으로만 뺑을 사 드셨지.

○**박정훈 위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박정훈 위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김현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끝났습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잘 대응하셔서 임기 끝까지 잘 지키시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그 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방송장악에 절대 희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께서 이진숙 위원장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안 한다고. 국회에서 고소와 고발이 한두 건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질의부터 노골적으로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면서 위원장을 일부 편파적으로, 제가 모욕감을 느끼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와 논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을 때 위안부 건을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장관급 공직자를 할 사람이라면 일제의 반인륜적 만행,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착취·성노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그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반인륜적 성착취·성노예, 강제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그것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파적으로 다시 질의하면 저는 그에 대하여 다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니까요.

○**최형두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뭘 하시게요? 도발을 하셔 놓고……

○**최형두 위원** 잠깐 내가 30초만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2분 먼저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김혜경 여사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소유예 아니고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7만 8000원입니다. 거짓에 근거한……

○**박정훈 위원**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김현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요.

○**박정훈 위원** 그건 선거법이고요.

○**김현 위원** 예의를 갖추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발언하시라고요.

○**김현 위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박정훈 위원** 기소유예한 것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김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끼어들지 마십시오.

○**김현 위원** 상투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세우고 2분에서 다시 시작할 거고요.

제가 여야…… 이준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에서만…… 이 순서를 좀 어떻게 바꿔 볼까요?

죄송합니다.

○**박정훈 위원** 바꾸세요, 바꿔.

○**김현 위원** 박정훈 위원 뒤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여야 공히 공식적으로 답변 기회를 얻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김현 위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공공기관, 행정청의 기관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시청각미디어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거나 질문하지 않도록, 미디어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통신위원회다.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춰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정 언론사의 사설에 나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소위에서 방송 3법을 논의해 왔고 그것 기초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했다는 거고 동료 의원의 법안 제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펌훼하는 발언을 삼가주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오늘 결산과 현안질의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다를 때는 상정된 후에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내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 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인데 이 자리에는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나왔다는, 기관장으로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개인적인 답변을 많이 하면 방통위 직원들도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위원장 최민희** 지금 이 말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법 아직 상정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이 상정되기 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상정되고 나서 숙지하신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겠지요.

○**최형두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30초 드릴까요, 진짜?

2분 드릴게요.

○최형두 위원 예, 2분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요, 본인이 하신 말은 책임지세요.

○최형두 위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고소·고발 건은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형두 위원 오늘 당초의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달리 현안질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소위원회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결산 건 또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상임위 소관 모든 정부기관장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과 결산 문제에만 집중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까 박정훈 위원도 물어볼 때 ‘상정 안건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현안을 해도 됩니까?’ 해서 현안을 하셔도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질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었던 건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 1년 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에 관한 주제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수많은 기관장들과 또 관련 공직자들이 나와 계신데 적어도 지난해 회계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과 또 주요 부처 간의 큰 현안들이 많은데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거는 그때그때 또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 때 다루자는 취지로 제가 그 구분 지어 주실 것을 요구했고.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소·고발 건이 큰 현안이 될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그때 다루면 어떻겠느냐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안질의까지 되고 하면서…… 그리고 당초에 없었습니다, 현안질의라는 것은. 그런데 현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시고, 알려 주신 대로 현안 된다고 말씀해 놓으니까 박정훈 위원이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를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저도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을 다를 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걸 구분 지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다를 때건 결산을 다를 때건 현안이 질의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현안질의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재판받는 위원들이 계세요. 그 결과 나온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개별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공격이 될 만한 질문은 저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과기부도 안 하고 우리 상임위도 안 했던 것, 저희가 AI 기본법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포용법뿐만 아니라 단통법 폐지부터 정말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AI 기본법 이후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된 부분 하나하나 다 막는 법안들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윤석열의 방송장악으로 황폐화된 이 방송을, 방송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것 하나만 해도 일이 많은데 AI가 과기부 소관이고 우리 과방위 소관이어서 그것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이 안쓰러울 뿐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송장악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 매몰된 적 없고. 특히 황정아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꼼꼼하게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AI 그리고 지역 AI까지 잘챙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십시오.

○**이준석 위원** 과기부장관님, 최근에 당정협의 진행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진행했습니다.

○**이준석 위원** 당정협의 저도 여당 시절에 해 보면 초반에 분위기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는 게 전망이 될 텐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 보면 사실 구호는 큰데 안에 세부 디테일로 가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지수가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에 올랐다가 주주친화적이지 않고 또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얘기가 죽 나오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애드벌룬들이 이제 정확히 평가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AI 정책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애드벌룬이 지금 큰 상태이고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액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장관님이 기업 애로사항 들으려고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력 문제 대두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용 전기요금 벌써 한 3~4년간 7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산업부장관과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 AI를 담당하시고 전력 문제가 이렇게 계속 대서특필되는 상황 속에서 전력 문제를 산업부장관과—물론 통상 때문에 바쁘시기는 하시지만—논의 안 하셨다는 거는 좀 의외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시겠습니까,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산업부장관님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력 문제 그리고 안정된 전기가 중요하다. 사실 데이터센터에서 중요한 게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데이터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산업부장관님도 이해하고 계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가격에 대한 부분일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세우신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가겠다 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결국 비용 올린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연구하고 아니면 운영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미 몇 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70% 올랐는데 또 왕창 오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기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이

만약 얘기하신다면 아니면 당정협의회에서 당에 얘기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있겠고 원자력 부분의, 원자력 융합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그래서 그 SMR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선명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금 올리면 AI 산업 발전 힘듭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장관님이랑 논의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직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AI 대전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와 전력 문제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이것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전력요금 문제가 바로 이렇게 대두돼 버리니까 굉장히 엇박자 나는 것 아니냐, 또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니까요 봐 주시고.

결국 GPU 획득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배분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이야기들이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연구를 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어떤 국가지원 사업에서 시제품 개발단계까지는 국가 지원이 투입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의 운영단계, 양산단계로 갔을 때 거기에 국가의 지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불공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AI 연구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상용화,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계선이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GPU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시킨다든지 단계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들고 와서 상용화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은 학습하거나 추론하는 데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추론이라는 것은 상용화 단계에서 추론이 충분히 GPU가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분이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원하겠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모든 기업들이 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데 GPU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당장 상용화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어느 곳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가 가지고 이제는 거기는 편당받아 가지고 많이 사야 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까지 들고 있으면, 우리 국가가 세금 들여서 마련한 인프라가 상용화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데 대한 전략 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으로 끊어 가지고 너희가 이것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래서 종합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정확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30년까지 5만 장의 GPU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2년 내에 최대한의, 3.5만 장 이상의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마중물을 빠르게 마련하고民間에서 AI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배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당연히 GPU 인프라야 다다익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투명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장관께서 저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화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경계선은 명확해야 됩니다. 국가예산으로 들어온 GPU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용화시켜서 수익을 얻는 단계까지 이것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지원이고 또 다른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기업에게는 진짜 그림의 떡처럼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이런 데서는 내가 들고 있으면 돈이니까 빨리 자원을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인프라는 만약에 이것을 임차하고 나중에 해제하는 것의 과정이 있어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더 세밀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희 의원실로 한번 따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장 최민희**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수급 방안의 핵심이 에너지믹스를 기초로 한 에너지 대전환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오해가 있어요,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24회 계연도 결산입니다. 아침에 결산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24년도에 방통위나 과기부는 무얼 했나. 그리고 과방위 차원에서 주로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방통위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방송장악 시도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거버넌스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요, 방송장악 시도. KBS의 박민·박장범으로 이어지는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했지요, 방송장악 시도를.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개정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정권 차원에서 일체의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저희는 했고 그것을 법 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해서 제일 최우선의 목표로 두었을 법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장은 고소·고발하는 이런 일은 아마 국회 차원에서 거의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거기다 여당 위원들도 여러 분들이 고소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치행위에 훨씬 더 치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을 개인의 정치행위를 위한 사적 유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이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행위를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정치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이런 정치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정치적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정치행위를 한 적이……

○**조인철 위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다만 5인 상임위원회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함으로써 완성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인철 위원** 사퇴할 용의는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기부 차원에서도 보면 지난 24년에 뭘 했을까라고 보면 떠오르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 대폭 삭감입니다. 물론 22대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24년 예산은 크게 관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고 2025년에 복원이 됐다라고 과기부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4년에 삭감됐던 예산이 23년 수준으로 25년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 복원이 됐다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존에 삭감된 사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다 는 이야기거든요.

예컨대 대폭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한 68건이 과제 중단하겠다라고 과기부에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3건이 그냥 받아들여졌고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삭감이, 그 사업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 대폭 삭감되었는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요청했던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챙겨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삭감됐던 사업들이 왜 삭감됐는지 보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희가 삭감된 예산에 대한 그리고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연구 중단을 요청한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사실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수용한 이유들은 충분히, 그 당시에 삭감된 예산으로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제의 어떤 숫자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원될 수 있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과거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좀 실망이 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모욕적인, 어쩌면 본인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그것도 8·15 광복절에 벼젓이 사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자리가 마땅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장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컼고 충격이 커던 사안인 만큼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4일에 과기부가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을 선발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어떤 어떤 기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SK텔레콤, NC AI, LG 그리고 네이버, 업스테이지입니다.

○**박충권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선발할 때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충돌 이슈가 있어서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박충권 위원** 명단이 비공개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정성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입니다.

위원 명단은 저희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부 전문가 중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위원은 혹시 참여합니까, 평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충권 위원** 참여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선발할 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선발했습니까? 믿어도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최대한 이해상충 문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각계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가들을 모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약 1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차명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됐지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그리고 국민께서 궁금한 것이 그런 겁니다. 주식거래 종목하고 시점이 문제인 거지요. 공교롭게도 과기부가 당시에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발표한 20분 뒤에 그때 매도를 했단 말이지요, 미리 사 뒀던 주식을.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종목들이 네이버하고 LG씨엔에스라는 종목이었지요. 이게 정부 발표하고 일치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 시점에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우연인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미공개 사전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AI 선발 정예팀 발표 직전이나 혹은 그 전에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알려 준 사실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알려 줄

의무도 없었고 저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박충권 위원** 장관님, 이것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알려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했는가, 이게 이춘석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의혹들이 있단 말이지요.

장관님께서 평가위원들이나 혹은 관련된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춘석 의원에게 이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혹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무 담당자들이나 관련된 저희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충권 위원** 물론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또 어떤 겁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분야의 담당 분과장이었던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또 그 시점에 정확한 종목을 거래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발이 됐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이 됐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은 정확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이 관리도 과기부가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겠습니까? 관리 잘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응모한 기업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장관님께 기피 신청까지……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기피 신청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해서 장관님께 일체 보고도 안 할 정도로 저희는 공정하게 관리를 해 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되도록 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수사 결과를 보면 추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배경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미래를 팔아 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신 전 국민이 아마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120년 전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공정을 넘어선 일종의 노예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 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과기부가 지금 SMR 기술 총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따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대통령님 지시로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과기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이미 자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원안위 등 관련 내용 파악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등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진행 상황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 때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그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는 곧 국가적인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도한 감사로 공직자들의 창의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상임감사 문제입니다.

상임감사가 AI 시대에 불철주야 뛰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대해서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해 보니 감사가 아니라 거의 사찰 수준인데 한국연구재단의 상임감사와 IITP 감사실이 감사 권한이 있다는 명목으로 직원

들의 모든 인사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 계획도 없고 감사 기간도 없고 감사반 구성도 없이 개별 직원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아시간, 월급, 유연근무, 임금피크제 여부, 재택근무 여부를 감사실이 상시적 권한을 부여받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상시적 인사정보 열람은 과도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이 있으니까 장관님부터 해서 과기부 개별 직원들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출퇴근 기록, 육아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 내역을 전부 다 상시적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더 가관인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시스템 담당자가 일부 권한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임감사가 이를 감사 방해로 엮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2025년 기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서 보면 공공감사를 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해야 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권한을 이렇게 남용해서 사실상 사찰을 이어 가면서 그리고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입니다. 보복까지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망동을 부린 상임감사가 누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입니다. 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고요.

연구 분야의 전문성이 일도 없는 검찰수사관 출신의 인사가 한국연구재단에 내려와서 윤석열이 하듯이 똑같이 사찰 감사, 보복 감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검찰에만 있었다 보니 법을 우습게 알고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표적·보복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필요 최소한도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 그리고 그 취지에도 이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래서야 연구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 실무자들이 감사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이것도 문제고 AI 강국을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을 훌려보내게 만드는 국가적 손실을 만약에 초래한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사실관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리고 또한 감사 권한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우고 공직자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규정 개선해서 이 부분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과기정통부에서 결산보고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질문 사항이 생겼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헌법적 책무지요.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헌법 제10조, 11조, 34조 다 규정을 하고 있고 하위 법령이 그것을 구체화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가 무려 97년도부터 이끌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취약계층에는 사실 생명 줄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4%나 삭감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을 못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까지 됐더라고요. 저희가 AI 한다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까지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는 회계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던 것을 내년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을 하기로 하셨어요. 이해를 해보자면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집행을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었냐하면, 읽어 볼게요. 지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사실상 권고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의 재량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만 장관께 요구를 드립니다.

하나는 최소한 현행 수준보다는 높은 예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향후…… 지금 지자체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2~3년간 그것 모니터링, 지자체로 운영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이 요구사항 두 가지 살펴 주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업 규모 말씀하신 대로 현행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저희가 지자체랑도 협조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렇게 취약계층 예산을 깎았는데 결산보고 보다가 반드시 동시에 짚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과도한 감사는 당연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짚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UNIST 상임감사님이 챗GPT 배우러 빨리 출장 다녀왔다는 것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때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외유성 출장 환수조치하고 재발 방지 제도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국감 이후에 계속해서 끌고 와서 이런 재발 방지 제도개선책은 나왔어요. 그런데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해민 위원** 환수조치하려면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감사관실 여력이 부족해서 1년 동안 감사 못 했다인데요.

내부감사 대상 기관이 31곳입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과기부의 감사기관 수하고 감사인력 비교를 언뜻 보셔서도 지금 최다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요, 각각 해야 되는 것이. 이 속도라면 종합감사 한 바퀴 도는데 지금 10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감사인력 확충, 이 데이터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사실 진짜 문제예요, 감사관실. 아까 24년도 회계결산 이것 말씀하시면서 98.3%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82.3%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이 문제인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해민 위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감사관실 예산 전용이 지금 정책기획관, 일자리혁신관, 국제협력비 같은 곳으로 계속해서 반복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집행내역은 떨어지고.

이것은 애초 편성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거나 아니면 본래의 사업 목적 취지를 계속해서 침식하고 있다는 건데 새로운 정부의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개선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으로는 데이터 이용해서 어뷰즈 케이스(abuse case) 걸려 내는데 AI가 제일 잘해요.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이미 이런 시스템, 한정된 감사인력 이런 걸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같이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언급했던 97년부터 있었던 취약계층 예산은 깎고 그다음에 외유성 출장 가는 사람 하나 감사 못 하고 감사관실 예산을 부서 ATM처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국민 세금 이렇게 쓰는 것 두고 보지 않겠다고 오늘 결산보고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고 오늘 선출되신 새로운 소위원장님하고 함께 계속해서 꼼꼼히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관실 예산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분들, 감사관님들의 외유성 출장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요 가능하면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전수조사 하셔서…… 몇 명 안 되잖아요, 보셨다시피. 전수조사 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철저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 질의는 노종면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 위원** 포항남·울릉의 이상희입니다.

우선 이진숙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끝까지 자리에 앉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상희 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관심 갖고 앉아 있을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일단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도 하고……

○**이상희 위원** 아, 소관 사항이라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이상희 위원** 특별한 의미는 아니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정보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공적인 사안이니까. 고소하셨지 않습니까? 고소 이번 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번 건……

○**이상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장 고소한 것……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상희 위원** 지금 국무위원의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이상희 위원** 국무위원은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검토를 하고 고소하신 것은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의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국감, 감사를 하시지만……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쩌면…… 얘기했잖아요, 공익적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체적 악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느낀 모욕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뇌 구조라는 말이 철학적·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신체적·생물학적 접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취하하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고소한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배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상휘 위원**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장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두 달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이상휘 위원** 공부 좀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떻던가요, 기업 재무제표하고 정부의 재무제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소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업에서는 어쨌든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것이고……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국가,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 편의 그리고 정책 방향들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장관께서 갖고 계시는 기업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하고 정부의 재무제표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부의 재무제표, 즉 예산에 대한 결산 자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순이익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결산의 형태는 미래 지향적이에요. 예를 들면 자원개발이라든가 등등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특히 기초연구라든가 원천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실적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년간 죽 지켜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혹여나—잘하시겠습니다만—정부의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것까지도……‘다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좀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이상희 위원** 2032년에 달 착륙, 그렇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이상희 위원** 32년. 그다음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 로드맵 있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꽈 가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은 예정대로 특별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32년에는 달에 우리 우주선이 갑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이상희 위원**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갔으니까 우리가 한 60년 가까이 뒤쳐진 거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려면 화성 착륙도 지금 상황이라면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35년에는 화성에 궤도선을 보내고 45년에 착륙선 보내는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달 착륙선에 대한 추진제, 추진 기관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변경안이 검토된 거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올해 검토가 됐었습니다. 추진 기관이 인체에 약간 해가 될 수 있는 추진제를 쓰는 그런 추진 기관이라서 요즘의 트렌드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추진제를 쓰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추진제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상희 위원** 우주하고 친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아무래도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유인 착륙선을 보낸다 이러면 추진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상희 위원** 우주로 가면 공기가 꽈 깨끗할 건데.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그래도 사람을 태우는 과정에서, 수단이기에……

○**이상희 위원** 아, 사람을 태우니까…… 다른 어떤 순환 쪽 그걸 이야기하시는구나……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보면요 32년까지 독자기술 개발해서 달에 깃발을 꽂겠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과정에서 보면 착륙선의 심장인 엔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엔진이지요—이것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다가 퇴짜 맞았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착륙선의 엔진은 자체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희 위원** 자체개발이 가능합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희 위원** 충분히요. 이게 결국 과기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아닙니까? 이원추진제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인데……

장관님,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혁신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지금 우리 착륙 추진체, 제가 전문지식은 없고 이것은 우주항공청장님이 답변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휘 위원** 과기부의 입장을, 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제없다는 거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문제 없습니다.

○**이상휘 위원** 국내 산업체를 언제, 국내 산업체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국내 산업체 선정하실 계획이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이상휘 위원** 언제쯤 이게 나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곧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현재 지금 원안대로 약간 인체에 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가 아마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그러면 이 추진체를 개발하고 엔진을 만드는 국내 산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계에 특히 우주 추진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이익적 논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해서—우리가 미국보다 60년 뒤졌습니다—빨리빨리 이것이 과학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잘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야당 위원님 질의와 또 방통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뇌 구조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 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범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사 먹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세우세요.

○**노종면 위원**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작전인가요, 습관인가요?

○**위원장 최민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야 위원님들 전부 해당되고 특별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 책임자들 유의해 주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시간 가기 전에요, 자꾸 반복되는데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위원이 발언을 하실 때는 여야 위원 모두 끼어들지 마시고 특히 답변하러 나오신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도를 지킬 지각 있는 성인입니다.

15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나중에 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본인 사안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대전MBC 현장검증, 우리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내부자들이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휴가 등등 사장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필연적으로 주장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역이, 본인이 제출한 내역이 빼곡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십·수백 가지의 그런 사례들, 부당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럴듯한 말로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꾸 그러려는 시도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하면 ‘나는 사적 유용이 없었다’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 말고 아님을 입증하세요. ‘집으로 초밥을 시키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무수히 빵 드시고 밥 드시고 음료 드시고 휴일·평일 안 가리고 새벽·오전·오후 안 가리고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드셨습니다. 과일을 안 사 먹었다고요? 포도라는 과일로 만든 와인을 그렇게 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특이한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도 ‘나는 그렇게 사용한 바 없다’라는 그 한 줄로 반복적으로 대응하셨는데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민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려 달라고.

대전MBC 사장직에서 사표를 낸 2018년도 1월 8일 오후 회사 근처의 한 제과점에서 4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지나서—아마 이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과점에서 53만 원어치의 빵을 구매합니다. 합쳐서 96만 원어치입니다. 이것을 빵 1000원짜리로 계산하면 약 1000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질의를 드릴 때도 수백 개, 1000개에 이르는 그 빵을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들고 회사로 가서 마지막 인사 선물로 직원들께 드렸는지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답이 ‘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도대체 본인과 수행비서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해 준 분이 계셨을 테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이런 이동 과정은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이 사표를 낸 날이고. 그동안 본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구매를 했고 어떻게 들고 갔고 또 어떻게 나눠 줬는지. 대전MBC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라고 빵 1000개를 유통기한 안에 먹어 치웁니까?

그리고 또 그날 사표를 내놓고 집에 가서, 직장은 대전이고 집은 서울인데 집에 가서 그 법인카드로 또 빵을 구매했어요, 사표 낸 사람이 법인카드로.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사적 유용은 없습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이 말만 고장난 축음기가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훈 장관님, 앞서 과기부3차관께서 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를 가동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약속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R&D 훼손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임명이 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시간 끌기 안 되고요 비뚤어진 동료애가 조사 과정에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의원실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행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기부와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원천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사와 굴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매국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그런 협정을 맺었다 언론보도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언론에서도 봤고 지금 국무위원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다 문제지만 ‘미래형 SMR 등 독자 기술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이 독자 모델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이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내용도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과기부는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위원장님, 질의를 좀 오버해서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릴게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 관계자 언급이 있어요. 과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과기부가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올해도 수백억 원이 책정돼 있던데 웨스팅하우스사의 경수로형이 아닌 비경수로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웨스팅하우스사의 검증은 안 받아도 된다, 이게 과기부의 입장이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직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하기에 앞서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 파악을 하고……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상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는 겁니까? 과기부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 보도되면 장관으로서 누가 이런 입장을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과기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가 이런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도 쟁기고 있었는데 일

부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발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오후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좀 아까 구혁채 차관이 장관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얘기 한번 공개적으로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아마 담당 과 실무선에서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치 못하고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종의 희망고문이 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계약 내용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과기부 실무자 말대로 과기부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SMR이 비경수로형이라……

○**노종면 위원** 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게 희망고문이 되니까요. 이거는 신속히 과기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될 사안인데 오후에 추가질의 하신다니까 그때까지 좀 준비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노종면 위원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오후 2시에서 2시 20분까지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더 하시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희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면 하실 거면 김장겸 위원까지 해서 하는 건 어때요? 우리만, 여당만 하니까.

○**최형두 위원** 오전에 할래요, 오후에 할래요?

○**김장겸 위원** 오후에 하지요. 오후에 속개하면……

○**위원장 최민희** 오후에 하신다잖아요.

○**김현 위원** 예, 오후에 하시면……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첫 데뷔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요 목표로 제시하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AI 시대를 맞이하며 국가의 존망에 대한 모든 열쇠는 결국 과학기술 인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각국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연구자 맞춤형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유출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장관님께서는 혹시 얼마 전 방영한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봤습니다.

○**이주희 위원** 별써 조회수가 12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은 중국의 전략을 보여 주었고, 반면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의사 면허를 향한 전 국민적인 쏠림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국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도 이공계열 자퇴 후에 의대에 지원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들어 봤습니다.

○**이주희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여기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간략하게 좀 읽어 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학번이고 공대 출신입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합니다. 그대들이 펼치고자 하는 꿈들을 펼치기엔 한국은 좁다.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한국 밖에서 능력을 펼쳐 보는 걸 추천한다’, ‘한국에서 학·석·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 중이다.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연구들을 이곳에서는 많은 정부·민간 투자 덕분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한국에 돌아가 학생들을 양성하며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이러한 현실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생각이 바뀝니다’, ‘캐나다로 이주한 공대생입니다. 내 자식 태어나는 것도 못 보면서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0%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은 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6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여기서는 평일에 할 수 있습니다’, ‘과기원 졸업생입니다. 메마른 흙에 씨앗을 뿌리는 기분이었다. 노력한 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 자연과학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인데 중국인 논문의 양과 질은 정말 놀라움.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그 이상임. 인재가 쏟아져 나옴’, ‘이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로 이공계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 지도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한국에서 교수는 하지 말라고’, ‘개인의 의대·공대 선택의 기준은 보상체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주고 한국은 애국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지금 우리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장관님, 정부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약 9조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2021년부터 2025년 기본계획 5개년 평균을 계산하면 연간 7조 원 규모로 예산이 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한번 통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기준 7조 4000억 원을 114만 6000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연간으로 하면 불과 일인당 평균 646만 원가량이고 월 5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연고대 대학원의 공학계열 한 학기 등록금이 약 700만 원임을 생각하면

정말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로도 너무나 모자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200여 명 중에서 61.5%가 최근 5년 이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그중 43%가 이 제안을 수락했거나 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고용조건 그리고 국내 석학 활용제도 부재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의 고급 취업이민 비자인 EB1, EB2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은 5847명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지난 3년간 평균 5700명의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안을 보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우수 논문 연구자 보유 순위가 나옵니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5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연구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2023년 뜯금 없이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R&D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줄면서 연구인력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지금 가속화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두뇌유출 지수가 2021년 24위에서 2024년 30위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인데요, 0점에 가까울수록 해외 유출 인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낮아진 이후에 줄곧 30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 의사가 있는 한국인 비율도 2023년 71.1%로 집계되어서 2021년, 2022년보다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올해 9조 3000억 원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 50조 원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에게 5000명, 일인당 연간 10억 원씩 1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과학기술에 투자했었더라면 정말 어땠을까 큰 아쉬움이 듭니다.

장관님, 이공계 대학 연구원들이 강화돼야 할 경력개발, 정부정책으로 꼽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예상 가능하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투자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장학금이나 인건비 확대와 같은 재정 지원이 70.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해외로 유출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공대에 미친 한국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잠시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실 예산의 증가, 투자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연연의 어떤 PBS 문제, R&D 예타 폐지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정부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AI 3대 강국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결산심사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무차별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진상조사 TF를 꾸리겠다는 장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개발 생태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훼손시킨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동의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2024년에 R&D 예산이 4조 5000억 원, 14.6%가량 무차별 삭감되는 대신에 국제협력 글로벌 R&D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과기부 소관 예산의 경우에 2023년 2569억 원이었는데 2024년 1조 1335억 원, 무려 341.2%가 증액됐습니다. 기술패권 전쟁 시대 글로벌 협력, 글로벌 R&D 협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원칙도 없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글로벌 R&D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기부의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과기부 소관 예산이 1조 13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1.2%. 그런데 신규사업이 9000억 원 가까이, 8972억 9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웠으면 잘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기초연구를 제외한 국책연구 신규과제 R&D 국제협력사업이 총 410개가 있습니다, R&D 글로벌사업에서 신규과제가. 그런데 410개 가운데 10월 이후에 R&D 관련해서 국제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96개나 됩니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10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연말쯤이 되어서야 이렇게 서둘러서 과학기술 R&D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예산이 이렇게 뒤늦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예산 효율성

의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초 분야 연구의 신규과제 역시 850개 사업이 편성됐는데 작년 4월까지 개시됐어야 할 연구들이 실제로는 살펴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늦게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4월까지 했어야 될 사업들도 말이지요.

국제협력 R&D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패권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 부분을 제대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로 그냥 예산만 늘려 놓고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보안체계 문제점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가 장관후보자 당시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입니다. 그 당시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지금은 4개월 정도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지요, 장관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APEC 장관회의 때 미국의 OSTP 크라치오스 실장이 방문을 했고 그때 과학기술 관련한 논의 때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에너지부에서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OSTP 크라치오스 실장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협력 R&D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제대로 국제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처럼 우리의 연구보안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고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연구보안체계 내실화사업이 진행됐는데 결산자료 살펴보니까 7억 51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게 충분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시급한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다소 부족한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제대로 보안 문제 살펴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애써서 막대한 R&D 예산 투입하고 글로벌 예산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을 진행한다고 해도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 민감한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R&D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기에

잘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국가 해제 문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벌써 8월, 9월입니다. 이 부분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보안체계 다시 재정립하시고 관련 사업들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제도화를 통해서 또 보안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들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R&D 예산 삭감했듯이 그런 주먹구구식의 R&D 관련 행정들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장관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R&D 삭감 TF 관련하여 다음 주까지 결과를 위원장실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의원실 당연히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쟁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천안기업 관련 자료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사무처장,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YTN을 통하여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즉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기부 혁신본부장이 오전 발언 중에 정정하거나 취소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오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예산……

○김현 위원 노종면 위원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의원실 와 있지요?

(「예」 하는 이 있음)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그러면 발언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진상조사 TF를 구성하라고 하고 제가 오전에……

○위원장 최민희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R&D 예산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위원님을 만나 뺐다고 했는데 그게 기억에 착오가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7월 15일에 임용되고 의원님 실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 정정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전해 드리시고요.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고 이것을 알박기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박기는 민주당이 원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EBS 사장 김유열은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 정권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새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거론된 방송 3법에도, 통과된 방송법에도 부칙을 통해서 현직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교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이것도 보면, 부칙 4조를 보면 ‘방통위 공무원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놨단 말이에요. 방통위에 정무직은 몇 명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들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다섯 명인데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저 한 명입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 정무직 위원장이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한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진숙 위원장 강제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뻥 이야기가 또 나왔던데 1000원짜리 뻥 1000개 이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2024년 6월 24·25·26 사흘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MBC 65년 역사상 법인카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저 혼자입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로만 사용했다는 제 기록이었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고……

○**김장겸 위원** 그런데 오전에 여당 위원님이 언급한 1000원짜리 뻥 1000개, 이거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법인카드는 직원을 격려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9일에 사퇴를 했고 말씀하신 롤케이크는 4만~5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만~5만 원짜리 한 20여 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환경미화원, 경비, 운전기사들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5만 원 안팎, 4만~5만 원 정도의 롤케이크를 구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1000개나 되는 빵을 혼자 사서 드신 것처럼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장겸 위원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폭거를 저질러 가지고……

PPT 1번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이·전용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손발을 묶어 놨는데, 그래서 기획조정관 예산이 올해의 경우 7억 1400여만 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예산은 주로 공공요금, 임차료 그런 기본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소송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반토막이 나면 사실상 경상비를 빼고 나면, 고정비를 빼고 나면 가용할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간부들 업무추진비도 절반으로 줄었고, 그것은 물론 저를 포함합니다만 저를 제외하더라도 간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통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소송 관련 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방통위 소송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소송비는 삭감 정도가 아니고 0원이 됐습니다.

○김장겸 위원 0원으로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팀을 구성했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거기에 보면 편향 보도로 다수의 제재를 받은 MBC를 비롯해서 이런 소위 방송사업자와 여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깎음으로써 이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겠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드리기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 직원들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전문가는 아니겠네요, 전문 변호사는 아니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대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장겸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구글하고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준에 진행돼 온 소송팀들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규모의 국내 소송도 문제지만 글로벌 테크 관련한 소송 대응도 큰 문제로 짐작이 됩니

다.

○김장겸 위원 그래서 외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여러 건입니다.

○김장겸 위원 배경훈 장관님, 지난번에 청문회 준비를 어디서 하셨어요, 사무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광화문우체국에서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 우체국은 스마트워크센터 거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거기는 원래 목적은 그거는 아니지요, 설립 목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우정사업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고지나 공문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셔서 적당히 쓰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1차관님이 답을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예, 이야기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차관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우정사업본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를 활용하도록 했고요. 인사처 규정상 과기정통부가 있는 본부라든지 그런 건물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상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장겸 위원 그런데 우정사업본부 시설관리 담당 부서와는 협의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제가 구체적으로 시설 담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본 지휘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라 그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게 직원들을 위한, 지방에서 출장 오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 집 기둥 내가 빼 쓴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대로 사용해 왔으면 그런 관행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갑질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장겸 위원 아니,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에요? 후보자에 대한 지원은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관련 절차대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 질의를 위하여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한 '4만~5만 원짜리 20개 정도 샀다' 그런 게 100만 원이 넘어서요,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월 8일 나폴레옹파자점에서 43만 9600원, 2018년 1월 8일 뚜레쥬르에서 53만 4100원을 썼습니다. 한 군데서 20개의 케이크를 4만~5만 원짜리 샀으면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잖아요. 숫자가 안 맞는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김현 위원 말할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이것 나중에 질의에 참고하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경우 참고하시라고 사실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아까 SKT 얘기했는데 SKT가 7조 원 손실 얘기했잖아요. SKT 유영상 사장이 올 상반기에 6개월 동안 26억 3600만 원을 받았어요. KT나 LG 대표보다 2배 이상 받았어요. 7조 손실이라서 회사가 망하게 됐다는 그 회사의 사장이 26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킹 사태는 4월에 났거든요. 저는 유영상 사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일곱 가지 부적격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1년 동안 하시면서 보여 준 것, 공직자로서의 자세,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봐요.

하나씩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에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선거법·공무원법 위반했어요. 이것도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감사원에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주의 처분 내려졌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 이해충돌, 공무원윤리법 위반, iMBC 주식 4200주 보유.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사유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조사를 받고 있고 가처분 같은 처분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무리한 발언을 해서 대통령한테 몇 번 주의를 받고 참석도 배제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방송법 취지 왜곡. 노조 추천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왜곡을 했어요, 본인의 SNS에.

두 번째, 대전MBC 사장 법인카드 유용. 지금 수사 중이에요. 1157회에 1억 4279만 원 경찰 수사 진행 중이에요.

세 번째,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사건. PC, 노트북 포함해서 241대의 장비 파쇄를 시도 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를 천공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돼 있어요, 지금.

네 번째,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의 여전사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85조 정치적 중립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위반,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주의 처분 받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해서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징계 대상 통보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이 물어봤지요, 사퇴할 거냐고.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통위원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사무처장대행님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스톱시켜 주세요.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 질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방발기금 수입이 9786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비해서 16.3%나 감소했어요. 방발기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훈기 위원 방송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방송사의 매출에 따라서 방발기금을 매기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훈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지난해에 192억 원 지원했어요. 이게 방발기금의 인프라 지원 비용의 31.2%나 돼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역·중소방송에는 7.3% 지원했어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이훈기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문화체육부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문체부 일반 회계로 편성하겠다고 문체부에서 저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수용한다 그러고.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작년에 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훈기 위원 그리고 방발기금이 모자라는데 관할 기관, 관리하는 기관도 아닌데 여기서 방발기금 주는 것 계속 문제 지적이 돼 왔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훈기 위원 내년 예산편성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들이 올해 예산보다는 줄여서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줄여서가 아니고, 작년에 문체부도 자기네 일반회계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원회에서 방발기금도 모자라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또 방통위원회에서 방발기금으로 여기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역할을 이렇게…… 자기네 방발기금을 내는 방송사들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방발기금도 안 내는 다른 정부 부처 관련 관할기관에 왜 방발기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체부도 스스로 자기네가 일반회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6년간 무려 1687억을 줬어요, 방발기금에서. 지역·중소방송에 1년에 40억을 주고 있어요. 10년 해도 400억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문체부로 일시에 이관하는 게 작년에 그렇게 논의는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정상황 때문에……

○이훈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시에 이관이 아니고 문화부에서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기부에서 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을 당연히 문화부에서 부담하게 해야 되는데 또 방발기금으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문화부에서 이렇게 자기 일반회계로 하겠다는데도 왜 방통위에서 돈도 없는데 방발기금으로 예산을 또 세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문화부도 부담이 되겠지만 스스로 일반회계로 하겠다 그러는데 왜 방통위는 없는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아니, 문화부에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것 예산편성할 때 여기 문화부에서 세우게 하세요, 그 예산은 지역·중소방송 예산으로 돌리시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뭘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

○위원장 최민희 일단 이 건은 계속해서 나온 건이고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20년 이상된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하고 문화부가 지금까지 협의해서……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완전히 일반회계로 이관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런 구

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 계획 없이 줄여 나가면 안 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이훈기 의원실에 보고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부는 자기네가 전액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 할 때 냈어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건 맞는데요. 문화부가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화부가 그것을 일반회계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무슨 개인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기관 간의 역할 분담 문제잖아요. 둘 중의 하나는 해야지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을 방통위가 규제하든지 —자금을 지원하면서—아니면 규제를 하는 문화부가 자금까지 지원하든지. 방통위가 자금은 지원하고 문화부가 규제하는 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통위에게 전적으로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체부가 전액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답변한 것은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해결을 잘해 보십시오. 계획 짜서 올리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문체부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방통위가 입장 정하고 문체부와 협의하세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4년도에 문체부의 입장이 이미 나왔는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알아요.

○김현 위원 그런데 뭘 또 확인해.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계획 짜서 올리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확인하세요, 위원장실에서 이훈기 의원님실하고 같이. 이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이진숙 씨,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박정훈 위원 저런 건 제지 안 해요?

○김우영 위원 아까 최민희 위원장의……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박정훈 위원 저런 건 제지하셔야지요.

○위원장 최민희 가만히 계시지요, 제가 지금 하려고 세우는데.

○김우영 위원 이진숙 씨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던데……

종군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만약에 저한테 이진숙 씨라고 하면……

○**김우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종군기자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도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군기자 출신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우영 위원**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 전쟁터의 참상을 기록하고 보도했던 사실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종군기자 출신이 일제하의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사상 검증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중단하세요. 세우세요.

○**김우영 위원**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마치 저를 죄인……

○**위원장 최민희** 세우세요.

○**김우영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취조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저도 못 받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종군기자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권이 말살되는 장면을 취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방통위원장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없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작년 8월 14일 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갑산이라고 하는 범사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지요. 전화받았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진숙 중인님,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 동원 건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 한 적 있지요?’라고 제가 물었고 그 후에 ‘혹시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 아십니까?’라고 했더니 중인 이진숙은 ‘예’라고 했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압니다.

○김우영 위원 그다음에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도……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했더니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였습니까?’ 했더니 ‘예’.

그분이 왜 전화를 했습니까?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물론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하지만 이진숙 중인이 청문회 때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거부하는 걸 보고 분개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모처로부터의, 특정하면 용산입니다, 용산. 그쪽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이진숙 중인이 이갑산 씨한테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놈 구조가 이상하다,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 국민들의 피맺힌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성노에 만든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뭐고.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 가지고 MBC 장악, 방송장악 그 기도 하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의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중단하고 가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임기입니다. 법적인 제 임기입니다.

○김우영 위원 TV조선이 2022년도에 통일교 주최 공식 행사 6건에 대해서 송출료 회당 1억씩 받고 중계 녹화방송을 했어요. 통일교 측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김전희의 측근이 ‘MBC를 없애려고 한다,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ODA 사건 등 각종 로비를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시늉이라도 해야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일교가 권성동 씨한테 돈 주고 김전희한테 로비하고 방송에 개입하고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몰랐기도 하거니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임 위원 5명을 바꿔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공직자면 국민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사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앉아 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전사예요? 무슨 뭐…… 아니,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을 위해서 있어요? 한국의 방송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MBC 노조 노영방송이라고 탄압하고 윤석열 명 받들어 가지고……

제가 그때도 표현했지요, ‘헛짓거리하고’. ‘헛짓거리하고’ 하니까 그게 뭐 모욕된 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바른 행동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헛짓거리라는 말은 모욕성 발언입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의 공적 도구를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이 모욕이에요.

종군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종군위안부를 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고소를 해? 뭘 잘한 게 있다고 땡땡 거리고 말이야.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잘한 게 있다고 땡땡거린 것 없고 종군기자로, 기자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그 기자 정신을 살려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때 대고 종군위안부를 부정을 해요.

○**위원장 최민희** 사실 이 상황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도 있을지 모르나 방통위라는 기관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김우영 위원님께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명칭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이진숙 위원장이 똑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학기술, 우주항공 쪽에서도, 원자력 안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소관 정부 부처에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의 과학기술, 원자력 안전 또 우주항공에 대한 협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배경훈 장관님 새로 임명되셔서 파악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계 공직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열린 게 언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차관입니다.

한 2~3년 전, 제가 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최형두 위원** 이종호 장관 때 11차가 열린 게 있습니다. 당시에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장관급 대표 협의체인 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우리 과기부가 지금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 각축이 심화된 시기에 예산도 예산이고 하지만 과학기술 한미동맹 강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과학기술 외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의회와 정부가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인철 위원이나 또 황정아 위원님, 또 박정훈 위원님 미국 특파원도 하시고 언제든지 한미 간에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신속하게 해야지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했으면 더 민첩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문제는 산업부·외교부에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만 원자력협정 개정입니다. 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과기부는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현재 원자력협정 개정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교부 주관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또 많은 과학기술계가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조에 사용후핵연료가 2만t, 그래서 곧 한계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번에, 지난가을이지요. 한번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지역마다 재처리시설 포화 상태, 이게 재처리만 가능해도 시점을 늦출 수 있고 훨씬 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원자력협정 개정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저희는 그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빠져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원자력 안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바로 수조에 지금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2만t 이것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 산업의 고도화뿐 아니라 지금 재처리시설을 둘러싼 국민들의 여러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미 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파이로프로세싱은 우리 과학기술부랑은 관계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지난번의 민감국가 지정은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아까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레벨별로, 미국 DOE 측과 그다음에 NSF 측과 장관께서도 만나신 적이 있고요, 계속적인 저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이전의 기록에 보면 90년대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걸 풀 적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달에,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 교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민감국가 지정을 계기로 조심해야 될 사안들 이런 것을 하셨는데 지금 과기부가 물론 그런 것도 해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관 취임과 함께, 새 정부와 함께 지금 한미 간에 우리가 미국 쪽에 새롭게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회에 원자력협정이라든가 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라든가 민감국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MASGA를 통해서, 십빌딩(shipbuilding)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살리고 하는 이런 원원 전략을 짠다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을 짜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관련 부처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건 과학기술 분야를, 물론 외교부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과학기술부만

큼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연구할 수가 없습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외교 협상의 창구는 물론 외교부고 또 산업적으로는 산업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과학기술의 원천기술 문제 또 근본의 문제에 관한 것인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귀중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많이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얻어 내야지요. 그런 치밀한 전략을 우리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짜고 있는지 나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자기 주체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까지 하고 많은 분야를 해서 그렇지만 기본은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을 국력 면에서는 6대 국가 또 G10의 위치에 올린 것은 이전에 우리 과학기술계의 수많은 노력 또 이승만 정부 때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던 그 오랜 땀과 눈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해서, 새 정부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의 더 큰 실질적인 과학기술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우주항공청장님,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한미 간에 새로운 협력 사안이 없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저희는 작년에도 NASA 국장을 만나서 한미 간에 아르테미스 협약을 맺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같이 쏘아 올리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미국과는 달 탐사 그 이후에 화성 탐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의 전략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알차게 준비하셔서 우주항공청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덕분에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진흥을 시키고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정말 한미 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 계시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최형두 위원** 지금 내일모레지요, 한미정상회담이? 이번에 우리 수행은 누가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수행 부분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것도 우리 전략이니까 일일이 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이 아니더라도 이 기회에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창구를 적극적으로 다시 열어서 그 실무 레벨부터 고위급 레벨까지 총동원하시고.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들 보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도 계시고 이정현 위원님도 계시고 박정훈 위원님도 계시고 다 한몫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미 의원외교를 통해서 뒷받침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그쪽 담당 상임 위원들과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2024년도 위법적인 2인 구조에서 소송비가 예전에 비해서,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

PPT 띄우시지요. 202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의 방통위 편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도를 넘어서서 2024년도에 무더기로 지금 법정제재를 가한 겁니다, 방통위가.

그러고 나서 지난해 2025년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다 떠나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혈세 낭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추경이 됐든 어떤 방향이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형태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PPT에도 나와 있지만 방송심의 관련이 30건, 심의 외가……

○**김현 위원** 아니, 방통위 것만 보십시오, 방통위 것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심의 외가 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취소가……

○**김현 위원** 행정조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빚어진 혈세의 낭비에 대해서 미안해야 된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래서……

○**김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합니다. 6월 10일 날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띄워 주십시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랑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그리고 나서 6월 27일 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독임제라는 용어를 국무회의에서 쓴 적이 있느냐’, 언론보도 인용하면서, ‘없습니까?’ 했더니 ‘예’라고 답변했고요. ‘없는 걸로……’라고 하니까 또 그때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세 번째 이어서 답변했고요.

다시 재차 물어봤습니다.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 있다’ 했더니 그다음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앞에서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저도 다른 용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직전에 위원장님.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게 무슨 거짓말인지……

○**위원장 최민희** 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는.....

○**김현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독임제를 주장해 놓고 16일 만에 전체 국무회의의 내용을 확인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거짓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던 것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억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이후에 회의록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편리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만약에 제가.....

○**김현 위원** 위원장이 그 정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면 정말 방송통신위원회를 당장 그만두셔야지요. 국무회의에 많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발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얘기한 게 한국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됐고 단독으로 보도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회의록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면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직원들이 볼 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거짓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그때는 없었는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서.....

○**김현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것과 행정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까? 방통위가 공공기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김현 위원** 방통위가 공공기관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김현 위원** 질문하는데 답변 끼지 말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입니까,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공공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김현 위원** 공공기관입니까?

사무처장직무대행 나와 보시지요.

방통위가 행정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김현 위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기

업이나……

○김현 위원 출자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런데……

○김현 위원 방통위가 출자 기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김현 위원 행정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김현 위원 331개입니다. 임기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직속 소속기관은 행정기관이고 공공행정기관 안에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공공기관이라고 불려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김현 위원 행정기관이잖아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 협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이 또 있습니까, 방통위 말고? 상임위원 5명을 둔 협의제 기관이 방통위 말고 또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대통령 소속기관 중에 위원회로는 방통위가……

○김현 위원 유일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공공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공공기관이라고 혼용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본인의 임기를 맞춰 달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김현 위원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같습니까? 대통령과 임기가 같이, 연임이 되면 6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단임이고 5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만둔 최시중 위원장 말고 6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랑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5년을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지금 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위치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려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어떤 취지와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현 위원** 이어서 질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모른다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방통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김현 위원**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잖아요.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 달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방통위 설치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답변이 방통위 설치법하고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현행 규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은 위원님의 질문으로 시작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이미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절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제정하자 이런 얘기가 여야 간에 나왔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그것의 연장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럴 때 정답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입니다’라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원회는 무관하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김현 간사께서 질문하셨다는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김현 위원** 대통령의 임기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춰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박정훈 위원** 알았어요, 뭘 얘기인지 다 알았으니 그만 얘기해요, 이제.

○**김현 위원** 왜 박정훈 위원이 끼어들어요? 위원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박정훈 위원** 아이, 그만 좀 얘기하라고. 여기 상임위 혼자 해? 그만 얘기하라고요.

○**김현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

○**박정훈 위원** 다 알아 들었어요, 지금.

○**김현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요.

○**박정훈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좀.

○**김현 위원** 본인이 질문을 잘못 했으면……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정리한 게 틀리지 않지요, 최형두 간사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잘못 알고 얘기했으면,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박정훈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얘기한 거 얘기해 줄게, 이따가.

○**김현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은……

○**김현 위원** 없으면 조용하다가 나타나면 항상 시끄러워요. 사사건건 다 끼어들고.

○**위원장 최민희** 그 질문은 박정훈 위원이 하신 게 아니에요. 짐장겸 위원이 하셨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김현 위원** 누가 다 알아들어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혼자 계속 떠드니까 끝났으니까 그만하라고 한 거예요.

○**김현 위원** 떠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박정훈 위원!

○**위원장 최민희**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였고.

 일단 반말 쓰시지 마시고요.

○**김현 위원** 떠든다고 얘기하다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까?

○**박정훈 위원** ‘입 닫아’는 괜찮아요, 그러면?

○**김현 위원** 언제 적 얘기를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까, 지금? 내가 박정훈 위원한테 얘기했습니까?

○**박정훈 위원**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세요, 김현 위원님. 그만하세요.

○**김현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이에요? 김태규 부위원장이냐고요, 본인이.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김현 위원** 김태규 부위원장 대변인입니까? 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얘기해서 짤 만들고 싶으세요?

○**박정훈 위원** 본인 생각 갖고 남 얘기를 자꾸 하시지 말고……

○**김현 위원** 본인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노리는 걸 모를거라 생각합니까? 적당히 끼어들고 적당히 말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박정훈 위원** 빨리하세요.

○**김현 위원** 건건 사사 끼어들어 가지고……

○**최형두 위원** 아이고, 한마디 하면 다섯 마디를……

○**김현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최형두 위원**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합시다.

○**김현 위원** 저한테 공격하겠다고 5명이 달려드는데.

○**최형두 위원** 뭘 5명이 달려들어요? 저는 전혀……

○**김현 위원** 간사까지 끼어들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간사님까지 끼어듭니까?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 간사님이 개입하시니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최형두 위원** 내가 개입했습니까?

○**김현 위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최형두 위원** 이제 진정시키려고 한 거지.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게 개입이지. 그게 진정이 아니라 더 흥분하게 하는 발언일 수도 있으니 그만하겠습니다.

PPT 띄우시지요.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요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적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

니다. 그런 적 있으시지요?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MBC와 iMBC는 별도 법인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4월 18일 날 과방위 회의록.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자는 건데요. 피곤하니까 쭉 읽어 보시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별도 회사라고. 그런데 제가 자회사라고 교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iMBC와 MBC는 iMBC 주식 가지고 MBC 관련 의결을 하든 MBC 주식 가지고 iMBC 의결을 하든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까먹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저렇게 팔려고 했지만 제가 팔면 MBC에 대한 보복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까 매각도 못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인 의도는 상관없다, 행위에만 적용받는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iMBC와 MBC는 관계없는 회사라고 나왔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직까지 최종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종 결과 통지 못 받았어요?

마지막 것 띄우세요.

7월 25일 날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한 거지요? 언론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경우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물은 거지요. 어떻게 판단 나왔어요? 이해충돌 아니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직접 통지를 받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의한 통보가 최종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이 뭐였나고요. 모르세요? 통보했다고 하던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 안 했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서울중앙지법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그것 묻는 거 아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관련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팩트인데 왜 이걸 못 하세요? 기자였잖아요.

제가 알려 드릴까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요.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를 안 했나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실.

수석전문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판단했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통보했다는데 통보 못 받았어요? 통보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공직자……

○위원장 최민희 아니, 스텁하시고요. 제가 묻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건으로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하세요. 통보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못 받았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답변하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이해충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아닙니까, 팩트인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

○위원장 최민희 확인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한 것 확인했고요.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긴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앵무새도 아니고 iMBC와 MBC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별도라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고장 난 녹음기 틀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곤란하지요.

그리고 화이트해커가 최근 북한 관련 KT, LG유플러스 해킹했다는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기부? 장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2차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런데 KT하고 LG유플러스가 과기부에 여기 관련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KT, LG유플러스 그다음에 한겨레 이 세 군데는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에는 정황은 없는데 KISA 전문 기술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포렌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그들이 확인하고 보고한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같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해킹을 한 대상을 지목했어요, 김수키라고. 그리고 김수키는 북한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북한 관련된 사람 혹은 집단, 무엇인지 모르나 그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KT나 LG유플러스가 보고한 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SKT 해킹 사태에서도 초기에 우리가 1차 조사했을 때, 2차 조사했을 때, 더 심화 조사했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번에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저희도 계속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장관님,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성장전략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AI 3대 강국이 그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저희 전체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약간 이게 핵심,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좀 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장관님이 답변하시기를 대통령 직속 AI위원회 거기에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잘 정리할 때도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하여 핵심 아이템이 뭔지 그게 정리된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김현 간사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소버린 AI 측면에서 한국형 LLM 개발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분만 쓰면 됩니다.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과기부가 AI 중심 부처, AI 선도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이유는 땐 것 아닙니다. 소위 바이오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AI를 활용할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해하는 부처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속기 같은 것 기재부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가 지금 AI국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과기부가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생각하는 핵심 아이템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가 내놓은 안은 전체 틀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 AI수석과 전반적인 국가 AI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족되는 9월 초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국가 인프라 AI 고속도로 그리고 AI 인재 양성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필요한 어떤 전력 문제, 데이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빠짐없이 그리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잘 세워서 조만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본인이 김혜경 여사의 기소유예 부분에 대해서 김현 위원이 기소유예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얘기 다시 하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별 말씀이 없으신데 김혜경 여사가 기소된 부분은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이재명·김혜경 부부 두 사람이 부정으로 사용한 게 1억이 넘습니다, 검찰에서 밝힌 게, 기소된 내용이.

그런데 이제 부부를 같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수익자고 김혜경 여사가 수익을 받은 부분이 800만 원이 넘는다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죄가 있다고 기소유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그런데 본인 당 출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김현 위원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물러나라고 지금 일관되게 모든 여당 위원님들이 주장은 하고 계신데 아까 PPT까지 띄우시고 5개 혐의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법 취지 왜곡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것 이재명 대통령 거의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진숙 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본인 선거법 위반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법 위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가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고발된 사건 수사 중인 사건이며 물론……

○**박정훈 위원** 예, 알겠어요.

법인카드, 빵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빵 그것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누구랑 개인

적으로 먹다가 누구 카메라에 잡혔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그 근거도 없이 왜 빵 먹었다고 빵을 샀다고 다 그거 가지고 사적 유용이라고 지금 단정하지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와 있는데도 그것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적 유용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아까 김우영 위원처럼 ‘그냥 나 쉽으니까 우리 방송장악 해야 되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우영 위원** 이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박정훈 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가라고.

○**김우영 위원** 뭔 그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박정훈 위원** 조용히 해요, 끼어들지 말고.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발언권 드립니다, 곧바로 드립니다.

○**박정훈 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직원 격려할 때 법인카드를 쓴 게 맞다는 거지요, 분명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뇌 구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저도 이진숙 위원장께서 그때 발언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국제적으로 성노예로 공인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의 치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사관을 밝히시는 게 좋았겠는데, 물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더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윤미향 씨한테 뇌 구조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윤미향 씨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 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해 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국민 상식. 그런 사람을 사면해 놓고 어떻게 답변을 모호하게 했다는 이유로 뇌 구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뇌 구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언제 들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자기들 잘못한 것은 다 덮고 남의 잘못 요만한 거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 나는 그냥 힘센 놈한테 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라의 상식과 그런 것을 다 무너뜨려 놓고 권력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 것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대통령하고 맞추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들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로남불도 국민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싫어요. 앞으로 1분 안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1분 더 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주고 왜 안 줘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것 첫 질의인데요?

○박정훈 위원 아니, 달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1분을 더 드릴 때 이상희 위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생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맥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박정훈 위원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요.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독재하는 것 아니에요?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차 질의는 전부 추가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안 주겠다.

○최형두 위원 다 5분 내에 끝내세요.

○위원장 최민희 2차 질의는 저는 원래 1분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 중에 매우 지능적으로 중요한 질의를 뒤로 빼서 그 질문을 이렇게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형두 위원 예외 운영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다 마치는 걸로.

○위원장 최민희 그런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상희 위원님도 아까 중요한 질의를 하다가 그게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처럼 딱 시간 맞춰서 1분 더 드렸는데 안 쓰고 중단한 분도 계시고요.

○이정현 위원 아까 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위원장 최민희 예, 1분 줬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하셨어요.

○이정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이것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만방자한 것 아니고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독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화운동을 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행복하신 최민희 독재 치하에서 살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거 행복한 진행입니다.

○김현 위원 아니, 독재라는 말이요 그렇게 희화화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박정훈 위원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박정훈 위원 들었어요, 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 국민의힘 정권일 때 공공기관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여야가 협의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고요, 저도.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입니다.

○박정훈 위원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을 주장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김현 위원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주장할 수가 없는데, 그때 위원장님은……

○위원장 최민희 저는 주장할 수 없고, 저는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데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준석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다행히 이준석 위원이 안 계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챗GPT가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했겠지요. 2023년, 2024년, 아마 여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민간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같이 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별달리 바뀐 게 없고 새로운 정책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2024년도 과학기술부의 AI 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나름 의미 있는 활동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국가 인프라 AI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 사실 지금 AI로 대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적인 노력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처음으로 설립돼서, 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그런……

○조인철 위원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계획들이 100조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현 정부 들어와서 공약에서 시작된 게 지금 100조 투자고. 그 100조 투자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숫자에 대해서 언급드리기보다는, 사실 지금 AI 투자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인철 위원 AI 투자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핵심적으로 따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뭘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AI 인프라, 기본적으로 기업과 학계 그리고 스타트업이 AI로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와 전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무엇보

다도 AI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과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AI 실행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면 거기에 이런 것들 충분히 다 담으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 적정규모가 지금 100조 내에서 들어가는 건지…… 100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民間자본 다 짜잖아요. 5년 동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민간투자와 AI 펀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소 많으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적의 효용성,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번 주지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들이 통과됐지요? 화요일 날 그렇게 된 거지요? 거기에 보면 광주의 AX 실증밸리, 대구의 AX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40%라는 것 알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국가사업인가요, 지방사업인가요? 반드시 지방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될, 제목만 보면 AX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방에서 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그 지자체에 40%를 부담시킨다라는 게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국가 차원의 사업이 맞고 지역의 AX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방 부담 40%에 대해서는……

○**조인철 위원** 좀 더 기재부랑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AX나 AI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범도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것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은……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를 AI 시범도시로 하겠다라고 공약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광주와 과기정통부 간에 지방 AX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계획을 상당히 많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최원호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EPZ가 뭐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만약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입니다.

○박충권 위원 구역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박충권 위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주민들을 보호할지, 어떤 조치들을 취할지 이렇게 정해 놓은 구역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지금 원자력발전소 지을 때 EPZ를 몇 km로 설정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최대 30km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최대 30km까지 하지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 SMR의 상용화 목표를 203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 소관인데, 안전규제 기반 기술개발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8년에 완료가 되더라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술개발 사업이 완료돼야 SMR에 관련된 EPZ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저희가 EPZ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박충권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거의 27년 완료……

○박충권 위원 27년 완료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박충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SMR 상용화 목표가 35년인데 만약에 그때 완료가 안 되면…… 그 부지는 언제 선정합니까? 언제까지 선정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부지 선정에 대해 한수원은 올해 선정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정확지는 않고……

○박충권 위원 올해든 어쨌든 35년까지 하려면 부지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박충권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지 선정을 했는데 EPZ에 대한 기준이 27년에 완료가 되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임의로 해서 지역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전규제상의 EPZ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되는 겁니까, 그 부지가? 혹은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30km로 잡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더 적은 지자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SMR의 경우에는 다른 원자로들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봉산 운전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무봉산 냉각재를 사용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SMR의 경우에는 EPZ를 20km 정도로 설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술개발이 완료됐을 때 20km로 설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원안위도 부지 선정할 때 있어서 더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지역들 중에서 최적의 지역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제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정말 적은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기회도 적어지고 최적의 장소를 잡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저희가 지금 부지에 관해서는 EPZ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선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정할 때는 그 반경을 한 1km에 대해서..... 약 1km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거기 1km 범위 안에다가 원자로를 짓겠지요. 그러나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박충권 위원 당연히 이 지역에 원자로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반경 20km 내지는 30km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EPZ 구역이 30km다 설정됐을 때 그 30km를 충족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SMR의 경우에는 좀 더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20km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원안위 입장은 뭡니까? 20km로 범위를 정해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수천억의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많은 지자체들이 조건이 뭐랄까 느슨하면, 느슨하다기보다는 타이트하지 않으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현재로서 20km가 맞다, 30km가 맞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현재 상용 원자로보다는.....

○박충권 위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뉴스케일이 인증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미국의 경우는 뉴스케일이 제시한 평가방법을 NRC가, 규제 당국이 인정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몇 km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충권 위원 확실한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4일간 10mSv를 초과하는 그 범위를 EPZ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km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이 규제를 마련하는, 규제기준 마련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상용화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빠른 시한 안에 만들어 내서 더 많은 지자체들과 더 많은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한수원이나 과기부·산업부하고도 협력해서 가급적 빨리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는 추가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배경훈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산불재난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기억합니다.

○**황정아 위원** 이동통신 기지국이 그때 무더기로 불통되고 인터넷 유료방송 서비스도 곳곳이 중단됐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화도 인터넷도 먹통인 상태에서 산불재난에 이은 통신재난 사태까지 경험을 했어야 했던 사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사태 때도 마찬가지인데 과기부에서 통신시설 피해와 복구 등에 대한 현황은 파악했는데 재난을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예방, 사고예방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 통신설비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유선전화도 안 되면 119 신고조차 못 하는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상황에서 통신설비 현황 등에 대해서 통신사들로부터 정부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한 대책·대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황정아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가의 자원이 어디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기부는 저희 의원실이 지적하기 전까지 광의의 피해 현황만 보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마을, 어떤 동, 무슨 동,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피해시설의 숫자에만 매몰돼서 재난을 숫자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음영지역이 발생해서 전화가 먹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곳들은 복구되었으니 전체적으로 90% 복구되었다 이런 방식의 소극적인 재난 대응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지난 폭우, 가평 중심으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세부지역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유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실의 지적사항 받으시고 지금 구체적이고 세밀한 피해 현황을 보고받는 매뉴얼, 이 자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음영지역, 통신재난지역으로 확인되어야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음영지역에서 긴급상황을 신고조차 못 하는 재난민들 상황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까?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데이터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재난대응매뉴얼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8월 폭우 들어서는 그렇게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 매뉴얼 마련되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인 보완 방안 등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폭우 등의 재난이 계속되고 있고 200년 만에 올 법한 폭우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서 통신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기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 방안들 역시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경훈 장관께서 인사청문회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었습니다. 기초과학이 있어야 AI도 있고 과학기술도 있다라는 문제에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 당연한 명제가 마치 R&D 카르텔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모욕했었지요.

지난해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온 문제인데 정부안 기준 무려 5.2조 원의 R&D 예산이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날아갔습니다. 제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 과기부 소관 1만 2801개의 계획과제 중에서 1만 1000개, 1만 1316개의 연구과제가砍감이 되었고 액수로는 945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개인 기초연구과제 수가 무려 9633개, 전체의 85%에 달하지요. 이 정도면 연구 토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부장관 되신 후에 예산砍감 어떻게 보고받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더 심각하고 더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R&D 예산의 정부 총지출 비율을 26년도 4.3%, 27년도 4.1%, 28년도 4%, 지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락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R&D 예산砍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확정적으로 투입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과기부가 제대로 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짐장이 멈춘다는 각오로 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지금 장관급 공직자로서 받는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이곳 상임위장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도 그렇고. 방통위원장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뭘 묻고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님 나오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들으세요.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인건비 과다 책정 이유로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금·부과금 처분했었지요? 언제 하셨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금년 상반기에……

○ 이해민 위원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상반기 언제 하셨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정확한 처분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황정아 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증거도 무시하는 답정너 표적감사라는 평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제가 처분을 하기는 했는데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해민 위원 동의를 안 하신 걸로 들리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하면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하고 함께 현 방송계를 정권하에 두는 작업을했던 인물이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했고 장관급 지내다가 방통위원장 됐고 그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취임한 다음 날부터 이전 정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탈탈 털지요. 그중의 하나예요. 좀 더 들어가 보지요.

국장님, 사업체인 빠띠가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하면 안 된다, 아직도 혹시 판단하시는 걸까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단 당시 감사 결과에서는 소프트웨어 임금단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제……

○ 이해민 위원 그러면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자가 인건비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안내를 했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 부분이 안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 이해민 위원 그러면 안내가 안 되었으면 사업체의 귀책사유입니까, 아니면 방통위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래서 당시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안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나 방통위 측에 귀책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재단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이해민 위원 방통위에는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통위에는 관리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를……

○이해민 위원 3명 경고만 했지요, 주의만 주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이해민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021년 2월 5일 빠띠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 체결이 되면 이제부터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국장님, 방통위는 당시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당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사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것을 가지고 처분을 받는지 모르겠고요. 정작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개통 사기……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시지요. 계속해서 넘어가시지요.

정작 해야 되는 사항은 개통 사기같이 휴대폰 가입할 때 불공정계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가입 이슈가 제일 많은데요. 계약한 내용이 다르거나 아니면 스미싱 소액결제 차단 관련돼서 결국 돌고 돌아서 이슈가 생기면 가는 곳이 어디나 하면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하의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 그 어느 누구도 법으로 늘려 놓은 정원 30명 채우지 못한 채로, 이것 예산집행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방통위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민들께 신속한 통신분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플랜을 의원실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 위원 포항남구·울릉의 이상희입니다.

과기부장관님께 R&D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R&D 사업 중에서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지원 사업에 2024년 예산이 4억 1500만 원 편성, 전액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학생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잔액이 2021년 4998억 원에서 2024년에는 7320억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학생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비율 자체가 여전히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연구책임자가 얼마를 적립하고, 이걸 자율적으로 정하고 과제가 끝나도 계속 쓸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돈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지요. 이런 문제 혹시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점점 방식도 말이지요,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이 50% 미만인지 기관 평균만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상휘 위원** 여기에 과기부가 2023년에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래서 일부 연구책임자가 과도하게 적립해도 평균치만 맞으면 문제없이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상휘 위원** 연구자 편의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마는 역설적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AI 인재 육성 측면에서 지금 석박사 그리고 포닥 그리고 비정규직 비전임교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결국 학생들이 인건비를 제때 못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제도의 취지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개선해 나가는 건 당연하지요.

적립금이 7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런데 여기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사용처 이것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연구책임자별로 적립하고 집행내역하고 이런 이자 사용 현황 이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매년 저희 지정기관 대상으로 운영현황 종합점검 중이고 앞으로 이를 예정처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것 정기적으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7000억이 넘는 돈의 이자 그다음에

사용처 이것을 우리 국회가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빨리 개선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옴부즈맨 하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2024년에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결산 내역 보니까 예산 2600만 원 불용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단순 제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2024년도 옴부즈맨 제보 건수는 21 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급 건수가 제로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너무 쉽게 대답하시니까, 좀 모르셔야 얘기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2024년도만 해도 12건의 무기명 제보가 있었는데 심의 의결된 건수가 몇 건이고 또 포상과 지급 권고는 몇 건이고 이런 것들 자료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이상휘 위원**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결국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옴부즈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이 한 명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옴부즈맨은 한 분이시고요.

○**이상휘 위원** 한 분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이상휘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제한 조건, 옴부즈맨 조사 대상 여부도 위원이 1명.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옴부즈맨……

○**이상휘 위원** 실무자가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이게 제보 건수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위원 수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쓰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위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면 사실 질의시간에 준비했던 걸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을 알고도 넘어갈 수도 없고……

○**위원장 최민희** 그것 하세요, 시간 2분 드릴게요. 사실관계 바로잡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 보고……

○**노종면 위원** 아니면 제재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면 본질의 시간에서 빼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야 다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을 테고요. 그것이 아니라 등골 빼먹은 파렴치범이나 거기에 준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려면 지금 이게 국민들께 다 노출되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원으로서 죄질이라든가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하에 이런 규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횡령, 검찰이 10년 털어서 1억 걸었지요? 그런데 1심에서 1700만 원 인정됐고 2심에서 8000만 원이 인정됐는데 이게 유용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미흡을 이유로 횡령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떠들썩하게 했던 장례비 모금이라든가 보조금 수령 이런 것들도 개인 유용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하지 못하고 절차 위법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딸 유학비 문제 이것은 유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판결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위안부 할머니를 상대로 춘사기를 쳤다, 이 춘사기 혐의 역시 무죄 나왔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 언론이 동원돼서 한 사람을 악마화한 것에 비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령이 1심 1700, 2심 8000만 원이 인정됐는데 그 해당 기간 동안, 10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으로 등골을 빼먹은 파렴치범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면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야 그게 다 각각의 권한이고 권리겠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런데 저게 팩트를 바로잡은 게 있어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예.

○박정훈 위원 뭐를 바로잡았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등골 빼먹었다는 표현에 대한……

○박정훈 위원 그게 팩트예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등골 빼먹었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 팩트를 근거로 노종면 위원님의 의견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5분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김장겸 위원 질의한 게 아니에요?

○박정훈 위원 자기 질의시간에 하면 되지 그거를 왜 2분을 더 주냐고요. 그게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런……
- 박정훈 위원** 의견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본인 의견?
-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예를 들면……
- 김장겸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박정훈 위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 질의시간을 써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별도로 시간을 주는 거는 편파적인 거지요.
-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 박정훈 위원** 팩트가 뭐가 틀렸어요?
- 위원장 최민희** 팩트를 기반으로 상대의 잘못된 규정에 대하여 반박하시는 의견을 제시하실 때는 더 드리겠습니다.
- 박정훈 위원** 윤미향 씨 정역형 나온 사람이에요, 정역형.
- 위원장 최민희** 질의하십시오.
- 김장겸 위원** 이러니까 독재라는 소리 하잖아요.
- 박정훈 위원** 지금 윤미향 씨 감싸는 거예요? 두 분이 감싸는 거예요?
-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시만요.
- 박정훈 위원** 윤미향 씨 감싸는 거 맞아요?
- 노종면 위원** 뭘 감싸요?
- 박정훈 위원** 그게 감싸는 거지 뭐예요, 지금.
-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잠시만요.
- 박정훈 위원** 팩트체크 하겠다는 명분으로 2분 받아 가지고 윤미향 씨 그렇게 잘못한 것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 노종면 위원** 제가 아는 한 박정훈 위원님이 이런 사실을 꼼꼼히 아셨으면……
- 박정훈 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다 보도됐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 노종면 위원** 이런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정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역형이 나오냐고요. 그만큼 위중한 죄를 저지른 것 아니에요?
- 노종면 위원** 검찰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은 법치주의니까 존중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지요.
- 박정훈 위원** 그러면 본인 의견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별도 시간을 받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 노종면 위원**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걸치시지 말고.
- 박정훈 위원** 뭘 걸쳐, 걸치기는. 뭘 걸친다는 거예요?
- 노종면 위원** 왜 말하다가 또 반말이에요? 왜 자꾸 반말하고, 왜 그래요?
-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 김현 위원** 입이 짧아, 입이 짧아, 짧아. 똑똑 끊어져요.
- 박정훈 위원**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라고.

- 지금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예요.
- 노종면 위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도……
- 박충권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고 싶은 의견을 질의 앞에 붙여서 했습니다.
- 김현 위원** 등골 빼먹은 얘기는 박충권 위원이 하지 않았어요?
- 박정훈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자기 질의시간 써 가면서.
- 박충권 위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 위원** 박충권 위원이 얘기했지요? 그 얘기는 박충권 위원이 썼지요?
- 박충권 위원**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최민희** 등골 빼먹은…… 그 음수사원(飲水思源)이 박충권 위원님이셨어요.
- 김현 위원** 등골 빼먹은 얘기는 박충권 위원이 쓴 거 아니에요?
- 박충권 위원** 내가 쓴 거고 제 의견이에요.
- 박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윤미향 씨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편드는 거예요?
- 김현 위원** 그런데 박충권 위원은 가만히 있는데……
- 박정훈 위원** 그분 민주당이 지금 편드는 거냐고요!
- 노종면 위원** 왜 이렇게 도 아니면 모예요?
- 김현 위원** 박충권 위원은 가만히 있는데 왜 박정훈 위원이 그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 박정훈 위원** 그게 편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잘못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 노종면 위원** 사고체계가 그 정도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현 위원** 등골 빼먹는다는 표현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등골 빼먹는 표현이?
- 김장겸 위원** 편파 진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 박충권 위원** 잘못됐어요? 징역형 받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잘못됐어요?
- 박정훈 위원** 지금 얼마든지 윤미향 씨 편드는 걸로 될 수 있어요.
- 위원장 최민희** 예, 잘못됐어요.
- 박충권 위원** 지금 두둔하는 겁니까?
- 김현 위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등골 빼먹었다는 얘기는.
- 박충권 위원** 윤미향 씨 두둔해요?
-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 노종면 위원** 비약하고 단순화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정훈 위원** 단순히 실수한 거를 징역형까지 때렸겠냐고요.
- 김현 위원** 등골 빼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비유를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비유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
- 김장겸 위원** 노 위원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따로 시간을 주고 편파 진행하면 안 되지요.
- 노종면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심 판결 난 것들은 그 이전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왔겠어요?

- 김현 위원** 왜 박충권 위원 발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걸 박정훈 위원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상하네.
- 위원장 최민희** 제가……
- 박정훈 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 김현 위원** 박충권 위원 발언에 노종면 위원이 팩트체크를 한 거를, 도움이 된 국회의원도 있는데 왜 박정훈 위원이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 김장겸 위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 박정훈 위원** 저건 의견이잖아요, 누가 봐도. 의견이면 본인 질의시간에 의견을 얘기하면 되지.
- 김현 위원** 그거는 위원장 판단의 영역이지요.
- 박정훈 위원** 그걸 팩트체크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고 받아주는 위원장이나, 그게 말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 김현 위원** 말이 돼요.
- 위원장 최민희** 그게 어때서요?
- 김현 위원** 받아들일 수 있어요.
- 노종면 위원** 우리 의사진행발언할 때 비슷한 발언들 서로 많이 했어요.
- 위원장 최민희** 많았습니다.
- 박정훈 위원** 누가 의사진행…… 오늘 혼자 5분 쓰셨어요, 의사진행발언.
- 노종면 위원** 양이 문제인 거예요?
- 박정훈 위원** 그렇게 편파적으로 드린다고요, 다.
- 김현 위원** 추추가질의 받지 마세요, 그러면.
- 위원장 최민희** 준비해 오세요. 예를 들면……
- 김우영 위원** 이따가 박정훈 위원한테 발언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 김현 위원** 아까 안 줘서 그런가요?
- 박충권 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혼자서 의사진행발언 세 번 하셨는데 여기는 1분도 안 주시잖아요, 1분도.
- 위원장 최민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 박정훈 위원** 여기 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위원장이.
-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이 위원장님 같습니다.
- 박정훈 위원** 그거를 제지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얻고 하세요.
-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목소리도 너무 크고 얼굴이 늘 이렇게……
- 박정훈 위원** 늘 아니에요. 왜 늘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 위원장 최민희** 저 쳐다보실 때는 늘 화가 나 계셔서 제가 가슴이 막 콜립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현 위원** 뭐가 콜려요, 콜리기는.
- 위원장 최민희** 질의하시라고요.
- 노종면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사표 낸 날 100만 원어치 빵을 사서 들고갈 수도 없는 그 양, 1000원 기준으로 하면 빵 1000개를 도무지 어떻게 운반했는지 상식적으로 상상도 안 가고 입증도 안 되는 걸, 그거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사고체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여당 위원이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사퇴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훈 장관님, 아까 언론에 보도된 과기부 관계자의 발언은 과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웨스팅하우스사의 경수로형이 아닌 비경수로형이기 때문에 협정서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이외에 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언론 설명 등에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했던 점이……

○**노종면 위원** 그거는 아까 들었던 답변이고요.

과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i-SMR, 그렇지요? 이것이 경수로형임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경수로형, i-SMR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혁신형 SMR 이것은 선행 연구를 웨스팅하우스사하고 연관돼 있는 한수원이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형이 경수로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협약이 맞다면, 이 비밀 협약이 맞다면 이것은 협정서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이것은 사전검증 대상, 그 협약이 맺어졌다면 이후에 문제될 소지가 매우 큰데 이미 과기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해 273억이 투자됐고 올해 530억이 책정돼 있으니까 이미 반 이상은 썼을 것 같아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과기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다툼이 이루어 질 것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산자부가 조사의 주체로 돼 있는데 과기부가 공동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희도 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도 지금이든 조만간이든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530억입니다. 2028년까지 과기부 예산만 1500억이 책정 돼 있어요, i-SMR에만. 그리고 참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원자력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수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된 여러 심의 의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와 관련된 책임을 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리께 건의를 하든 국무회의 과정에서 건의를 하든 공동조사 주체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지금 i-SMR 이

외에도 다른 R&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전반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전문성을 갖고 조사하는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1분은 그냥 안 쓰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잘했네. 잘했어요.

○**노종면 위원** ‘잘했어요’ 하면 되는데 앞에 ‘잘했네’는 습관인 것 같아. 그거는 좀 고쳐주세요.

○**박정훈 위원** 남의 습관까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노종면 위원** 그게 반말이니까 그래요. 반말이니까 듣기 불편해서,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1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주희 위원께서 첫 번째 상임위를 경험하시는데 우리 상임위가 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휘 위원** 오늘은 괜찮지요. 좋지.

○**김현 위원** 맞습니다. 오늘은 외려 좋은 날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제 말은 늘 이렇게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박충권 위원** 오늘 좀 마일드한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 이거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박충권 위원** 그거는 속임수지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 간사님.

제 말이, 이렇게 순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정회를 몇 번씩 해야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주희 위원님을 생각하여 저희가 매우 조용하게 사근사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2020년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혹시 취지 무엇인지 아실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인터넷상에서 특히 플로팅 광고라든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주희 위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라는 허위·조작 뉴스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런 배경으로 2018년도 방통위의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팩트체크 활성화 관련 시스템과 기술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9년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는 플랫폼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 분야별 제안사항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정부에는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세부사업 추진이 요청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 상황을 보면 팩트체크 활성화 예산이 2023년도, 2024년도에 불용되고 올해와 내년에는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시다시피 2023년 1월에 팩트체크넷 쪽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 부분 제가 질문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동안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2024년도 초에는 방통위 감사결과 간접보조금 사업자의 부정수급도 지적됐다고 합니다. 반면 해당 사업자인 빠띠, 아까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재 이의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SNU 팩트체크에 네이버 지원이 끊긴 게 2023년 말인데 공교롭게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방통위 감사가 바로 다음 달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에 맞장구치면서 여당인 국힘은 국민 협세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팩트체크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윤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위원장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를 정치편향적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에 팩트체크넷 쪽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이주희 위원** 시간관계상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추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탄압한 빠띠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등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조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이주희 위원** 이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표적감사로 민간 팩트체크 지원을 무산시키고 당시에 여당도 편향성 시비를 제기했으니까 사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잘 사용하면 될 텐데 아까 보셨듯이 23년도, 24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도 혀위조작정보의 폐해와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일 텐데 왜 불용 처리한 것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체크넷 자체가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편향성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팩트넷 자체가 편향성 시비가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빠띠가 민간사업자입니다.

○**김현 위원** 맞습니다. 민간입니다.

○**이주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해야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 위원장실에서 팩트체크 중입니다.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 최민희** 왜 그러세요? 팩트체크를……

○**김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위원장 최민희** 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희 여당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구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환경기반 조성사업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로팅 광고 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에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켜면 막 돌아다니는 광고, 엑스를 누르면 그게 없어지는 건데 그 플로팅 광고가 너무 지저분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자라는 것은 인터넷 광고 문제 얘기예요. 플로팅 광고를 인터넷 환경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체크넷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빼 원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 이사회에서 해산이 된 거고. 그것을 2024년 1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2024년 1월 23일 날 복귀하고 그 직전에 자체감사, 방통위 감사를 시켜서 과징금 7억 4000만 원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해 4월 달에. 이진숙 위원장이 1월 23일 날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결정했던 사건이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 있을 때 했던 게 팩트체크넷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국회에 와서 답변을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후에라도 그렇

게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준비하고 나와라’ 이것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책임을, 자기 답변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져야 하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팩트체크넷과 관련한 이진숙 위원장 답변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원장 최민희** 저희도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 팩트체크넷과 관련하여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빨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오면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별도의 시간을 부탁드리지는 않고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질의시간…… 1차 질의에서도 제가 1분 주신 것을 깜빡하고 못 썼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다가 주시겠습니까? 조금 한, 7분 정도……

○**위원장 최민희** 예,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저는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면 빵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빵, 빵, 빵 하시니까 제가 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김현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빠띠 얘기를 하시면서 빵 원으로 만들었다는, 또 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서 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님, 7년 7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이날은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사표를 제출한 날입니다. 1월 9일 자로 제가 퇴직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1월 8일 날 사표를 내고 그날 서울 자택 부근의 빵집 그리고 대전의 자택 부근의 빵집, 두 군데 빵집에서 100만 원가량의 빵을 구입했다고 법인카드를 그으셨습니다.

법인카드로 무슨 빵을 샀는지 과자를 샀는지 여러 가지 단계마다 진술이 좀 바뀌셨어요. 오늘은 롤케이크 20여 개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롤케이크를 사신 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기억에 4~5만 원 정도의 롤케이크 내지 쿠키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이렇게 또 말씀이 바뀌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 아까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됐어요.

롤케이크 20여 개를 구입했다고 했다가 제가 진술이 바뀐다고 하니까 롤케이크와 과자, 쿠키를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자류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과자류, 빵류, 롤케이크 바뀌었다가 또 진술이 바뀐다고 하니까 롤케이크와 쿠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노종면 위원이랑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대전에 가서 현장검증을 할 때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팥빵으로 치면 280개 정도의 가격이다, 50만 원어치를 대전 빵집에서 구입하셨는데 ‘단팥빵으로 치면’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도 전혀 ‘나는 롤케이크를 구입했다’라고 정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 텐데 이 발언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직서를 낸 날에 카드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강남 집 근처에서 수많은 소액결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설명드렸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하나 이진숙 위원장이 거짓 증언을 하신 것이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 동료 위원께서 도와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심당에서 쓴 적이 없지요?’ 하니까 법인카드 쓴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셨다가 제가 그게 아니고 성심당이 아니라 다른 법인명으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때에서 시인을 했어요.

이런 법인카드와 관련된 진술들이 계속 바뀌고 거짓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 영상,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제가 질의를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식으로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낸 날 100만 원 가까운 법인카드를 빵 구매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심지어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4000원짜리 법인카드 결제도 있어요, 1만 2000원짜리 보리밥도 혼자 드셨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영업을 위해서 썼다고 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니까 직원 격려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셨고 롤케이크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바뀌시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봐야 되겠지만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너무나 크고 중대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주점 그리고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법인카드를 썼어요. 더군다나 와인과 관련해서는 회사 소유의 별도 법인카드, 1000만 원 넘게 와인을 구입하는 데 또 썼습니다. 와인바에서도 수백만 원씩 회삿돈을 썼고 자택 근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로 소액결제를 남발했고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유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직원들 격려하는 데만 썼다 그리고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계속 거짓 증언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빵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 증언 한 적 없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새벽에 4000원 쓰신 것은 누구하고 업무 추진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사가 대기 중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기사가 위원장 카드를 썼어요? 그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기사는 다른 업무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용 업무카드가 있는데 위원장 카드를 굳이 써서, 4000원 썼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공용 업무카드도 위원장 업무카드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인카드가.

○**위원장 최민희** 아니, 게다가 1만 원 미만은 못 쓰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경찰 수사에서 제가 사적으로 쓴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 하세요? 지금 경찰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이정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이야기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직원을 격려했다고 하면, 아까도 직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사직서를 내기까지 한 달 가까이 대전MBC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지요.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와 가지고 빵을 췄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빵을 받았다라고 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증언을 혹시 확보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원들이 파업 중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저를 보지 않았다고 제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 동선도 저희가 지난 청문회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집 근처에서 빵을 사고 3시간도 안 돼서, 2시간 몇 분인가 지나서 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동선들을 따져 봤을 때도 대전MBC에 들러서 빵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MBC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지배를 받는데 지금 법인카드 문제는 회사 내규상시 감사에 의해서 항상 감시를 받고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대전MBC 자체감사도 있었고 본사에서 전 지역사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김장겸 위원 제가 임원 할 때도 보면 카드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였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영업용에 나누어 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사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 기준으로 볼 때 일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확신합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위원장 몰아내려고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처럼 이렇게 온 공세를 펴붓는데 우리 수사 결과 지켜보시지요.

현안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납치 광고 이것 한 번씩 아마, 이진숙 위원장께서도 경험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경험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게 방통위가 지난 6월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위 플로팅 광고들이 납치 광고로도 불리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해서 저희가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70%가 이런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런 광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라는 조사도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벌금 1억 원 정도, 징계를 해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쿠팡 같은 경우 매출 4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소위 아주 악성인데 이게 리다이렉션(redirection) 광고, 클릭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게 쿠팡의 어떤 방식인데 이것은 좀 사실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드린 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금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김장겸 위원 그런데 사실조사가 보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가 2023년 9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조속히 좀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조속히 조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겠고 특히 이 불편 광고, 플로팅 광고에 대해서 KAIT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PPT 4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법률 개정, 법령 개정

이런 새로운 규제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쿠팡파트너스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운영한다 그러면 이 쿠팡 광고를 유치하면 거기에 쿠팡 광고가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되면 제 블로그로 해서 제가 돈을 얼마 받고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경훈 장관님, AI 바우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AI 바우처, 이것 지난번에……

PPT 8번 주실까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겁니다. AI 바우처 사업이 사실 횡령, 중복 참여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많아요. 부하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성의 있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리고 AI 바우처 사업이 이런 부정수급과 부정사용 관련한 지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왔는데—PPT 9번이요—개선 의지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장관님 잘 모르시는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AI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김장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중복 참여 이런 것에 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부분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김에 부정수급하고 중복 참여 기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제재 이런 개선 방안을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시간이 남았나요?

아까 어느 여당 위원이, 위원장님이 그러셨나 누가 그러셨나 정보통신진흥기금하고 방송발전기금 이것 재정건전성이 아주 악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번 청취 보셨어요, 장관님?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 정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2차관이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예,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정보통신,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기금으로부터 돈을 기금에 갖다 쓰는 규모가 상당히 5조 이상 누적이 돼 있고 또 매년 이자로 나가는 규모도 상당히 커

서 지금 저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배경훈 장관님,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입니다마는 저는 국회의 권한 중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권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뿐만 아니고 직전 연도 결산을 통해서는 적절하게 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 작업 자체가 국정을 감사하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 심의한 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과기부가 우리 국회 예산심의권을 벗어나는 범위 또 심의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년 4월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고 한 뒤에 실제 5개월 뒤인 24년 9월 26일 날 국가AI위원회 출범식이 개최가 됩니다. 저는 출범 자체는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범식에 한 2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관님, 이것 어디서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2차관……

○한민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니까 운영사업은 전액 예비비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돈들은 24년 11월 19일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AI 출범식은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살펴보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출연된 4개 사업에서 각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일반회계, 방발기금, 정진기금…… 지금 PPT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2억 6700만 원을 사실상 끌어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당시 당연히 계획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보면 예비비를 신청해서 받거나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일반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 각출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과기부나 NIA 모두가 지금 PPT에 있는 것처럼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당시 출범식이 9월 26일이었고 예비비 신청 10월 그리고 예비비 배정이 11월에 됐습니다.

○한민수 위원 아니, 그 예비비 말고요. 기존 예비비를 가져다가도 출범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당시 전임 정부가 뒤늦게 AI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구성하면서 서두른 겁니다. 적절한 국가재정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뤄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는 지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 자료를 봐도 국가AI위원회 출범식 집행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써도 되는지,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그리고 감독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당시 재정 당국의 가이드도 있었지만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바르게 집행이 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니 인정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한다고 했으니까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년 1월에 윤석열 정부가 중앙부처의 청년인턴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인턴 채용 실적을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자료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에 25명—과기부입니다—과기부가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소요예산액 96%인 1억 9000만 원은 총액대상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하면 안 되지만 완료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그만할까요?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은 이게 첫 질의세요. 그래서 2분을 더 드려야 됩니다.

○**한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셔 가지고.

보니까 그다음 해예요, 24년도. 이 사업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24년도에는 청년인턴을 9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가 부처라면, 정부 부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때 당시 안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 해에는 총예산이 8억 6400만 원인데 무려 64.2%에 해당되는 5억 5000만 원이 또 전용이 됩니다. 보시면 전용되는 것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중앙전파관리소, 총액대상 인건비 여기에서 또 전용이 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또 총액대상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한 해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편성도 하지 않고 다시 또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다고 장관님은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한민수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아니, 이게 23년도 거라면 그런 말씀이 타당할지 몰라도, 물론 전임 장관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재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재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 정부 때의 일입니다만 국가 세금이 그 액수의 크

고 작음을 떠나서, 물론 저는 5억 5000만 원이나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2억 6700만 원이나 모두 큰돈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런 국가 세금이 함부로 쓰이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배경훈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훈기 위원 지난해 10월에 KT가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과기부장관하고 김영섭 KT 대표이사한테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때 AI를 위한 인력 재편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한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KT가 5800명을 희망퇴직, 자회사 전출하고 2500명을 토탈영업TF를 만들어서 강제 배치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몇 개월 동안 24년, 작년 11월에 한 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올해 1월·5월·6월에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세 분이 자살을 했어요, 여기에 적응을 못 하고. 그리고 7월에는 또 한 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이게 다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내용 때문에 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국정과제로 말씀하시는 게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저도 우리 당의 산업재해예방 T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조하시고 아마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KT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저도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몇 군데 잤는데 KT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단 그때 현대차가 1대 주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하고 그럴 때 과기부장관이나 KT 대표이나 절대 우려가 없다, AI를 위한 인력 재편이고 KT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신적 산업재해라는 것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게 정신적 산업재해예요. 일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갖고 현장도 가고 관심을 갖는데 이런 정신적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고용노동부도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고 지금 통신 3사를 관할하는 과기부는 더더욱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거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현장 가서 점검을 하거나 한 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알기로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사람이 이렇게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지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들이 계속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 관련돼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일들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산업재해, 통신사들의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있는 그런……

○**이훈기 위원** 차관님,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과기부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도 가서 점검도 하고 대책도 좀 세워 달라는 거예요. 계속 죽어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방지하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방지하지 않겠습니다. 진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아까 김현 간사님이 요청드린 팩트체크넷에 대하여 팩트체크를 일단 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는 우리 행정실에서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왜 팩트체크넷은 일을 못하게 되어 해산하였는가? 자발적 해산이 아니고요, 2022년 정권이 바뀌면서 팩트체크넷에 6억 정도 배당되었던 예산이 2023년 3억으로 확 축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팩트체크넷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2023년 1월 25일에 팩트체크넷 운영자인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팩트체크넷은 누가 구성했는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실행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해산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끊임없는 편향성 시비로 인한 암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1월 25일 팩트체크넷이 해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곳에 3억 5700만 원 예산 중 2억 70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팩트체크를 할 단위가 없는데 예산을 계속 편성했고 당연히 불용되신 것입니다.

김현 간사님, 혹시 이 팩트체크에 추가하실 것 있나요?

○**김현 위원** ……

○**위원장 최민희** 나중에 생각나시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방통위 사무처장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뉴스웨어라는 인터넷신문에서 통일교가 특정 종편에 여섯 편에 걸친 통일교 행사를 송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기관이, 특히 종편이 통일교라고 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건전한 종교활동의 영역일 수 있는가? 의문을 다소 갖는 그런 곳에서 하는 행사에 송출료를 대거 받고 송출했다 이 의혹이거든요. 자료 요구를 즉각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가 통상 방송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고 또 과징금·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재허가 심사 시에 반영할 수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한번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게 TV조선뿐만 아니라 지역MBC 연합 법인인 MBCNET에서도 세 차례 중계가 있었고, KBS는 통일교 광고를 내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2022년도 대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사람한테 거액의 자금을 줬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대단히 비싼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그런 것들을 선물을 했다, 이게 지금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초에 윤석열 후보와 미국 전 부통령이었던 펜스가 만납니다. 그 행사가 통일교 관련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펜스를 부를 때 7억의 돈을 줬다고 해요.

특정한 종교, 특히나 건전한 종교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베 테러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또 대한민국 현재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한가운데 특정한 종교집단이 개입을 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집단이 방송 채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을 악용했다면 방송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의 직무를 상당히 소홀하거나 태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말씀 주신대로 지금 열거해 주신 방송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규정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MBCNET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PP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랑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과기부장관님께, 김형숙 교수라고 하는 한양대의 사이비 교수가 마음건강 디지털 치료제 이런 사업을 과기부와 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실적과 성과도 매우 불투명하고 그랬는데, 그 김형숙 교수 사

업팀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KT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화건설이라고 해서 권성동, 통일교로부터 로비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씨의 사촌 동생이 신화건설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형숙 일당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다.

저는 과기부가 제대로 된 과학기술입국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폐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국민들께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엄중히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저희가 충분히 진행하고 법적으로 법령 그리고 규정 위반 사항들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건 그 관련 사업이요 사업 평가에서 미흡받았지요?

이것 누가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미흡받았습니다. 그것은 낙제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낙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낙제되면,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요 여기에 부정 집행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거나 다음에 참여 제한을 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미흡의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미흡의 원인이 그 사업이 예산상의 기획과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었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런 부분도 있었고 투자액 대비 성과가 좀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 최민희** 애초에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은. 거기에 KT가 39억인가 삼십 몇억 같이 넣었지요, KT가.

이것 이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이 나왔기에 철저히 파헤쳐서 책임 물어 주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나라의 돈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에 계속 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원자력협정 개정이 언론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가로 우리 한국 측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분을 좀 이루어 내야겠다 해서 그중의 하나의 대표 사례로 원자력협정 관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2015년 개정 협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네 가지 필라(pillar)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력 거버넌스에 보면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을 설치하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협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최상의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이것 우리 과기부에서 참여한 적 있습니까, 2015년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2023년에 또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도 해 보고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해 보면 부처가 자기 역할을 어쨌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 또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최형두 위원** 과학기술이 아무리 중요해도……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여당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R&D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논의 수렴 없이 진행되었나 이 부분에서도 과학기술부의 패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역시 원자력협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외교부에도 물론 당사자들이 있겠습니까만 과학기술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협력 거버넌스에서 고위급위원회 운영 현황을 잘 확인 못 하시고 계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고위급위원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열린 적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천착하지 못하시더라도 과학기술부 전체의 그동안 축적된 역량으로 이 분야를 계속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제가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원자력계에서도 하나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일부에서는 완전히 사기 사업인 것처럼 비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진전이라든가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하는데, 내가 질의 중에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 게 미국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2023년에 나온 보고서, 기술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갔던 것을 어느 시기에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이 최근에 어느 국제회의에 갔더니 일본 쪽 학자가—아주 높은 국제기구 수장을 지냈던 분이었습니다—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한국이 빨리 미국과 협력하고 일본도 협력한다면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의 폐기물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저는 상당히 여러 진영별로 또 이념별로 이 문제를 아주 백안시하는 세력도 있어서 아마 지금 정부가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산 낭비가 심한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 기술적 적합성, 만일 그 말대로 한

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게 정말 꿈의 기술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이미 정부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냥 힘들된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안위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해서 8월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으셨네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것 계속하셔야 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 되신 정동영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이것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보고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시를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IAEA의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북한 핵무기가, 지금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지만 북한 핵 원자력시설에 또는 우라늄공장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원안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북한에도 알리고 또 IAEA와의 협력도 강화해 주십시오.

IAEA와의 협력 문제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IAEA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류제명 차관님, 혹시 2025년도 주요 정책과제 중에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지금 과기부하고 교육부하고 방통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요,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따로 관리를……

○김현 위원 아니요,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고 그다음에 AI 리터러시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AI 기본법 제정 이후에 법령 개정안 관련해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기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하고도 논의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없으면 함께 논의를 하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안 하고 있고. 방통위가 아무리 망가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 하더라도 실무 차원에서는 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시란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용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주무 영역입니다.

주무 부처 중에 유일하게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책임 있게 담당하는 부처는 과학기술부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을 중도하고 공영방송을 떠려잡겠다고 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 반드시 실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현 위원 그리고 PPT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팩트체크 플랫폼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께서 단통법이 폐지되고 난 뒤에 단통법 이후에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일을 1월 23일 복귀 후에 그리고 7월 1일 까지 김태규 부위원장이 있는 2인 구조에서 여러 일들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앱결제 사후조치 못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5인 구조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는 점. 그래서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 대해서 과징금 7억 4000은 복귀하자마자 진행을 했어요.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3일 날 대면보고 했고 위원장에게 2월 4일 날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 사전 통지를 방통위가 미디어재단에게 했고 이것 과정에서 무슨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국장님이 위원장이었고 자체감사도 방통위에서 하게 하고 또 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무슨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했는데, 이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앞서 여기 나와서 발언대에 섰던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징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과징금으로 해서 빠띠에다가 공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안을 그렇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고발된 건수 다시 한번 보시지요.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카 사적 유용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시절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차례 쓰고 유튜브에 나가서 보수의 여전사라고, 방송 포함한 특정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또는 인터뷰에서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됐는데, 4월 30일 날 고발됐는데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

○최형두 위원 미안합니다. 이 페이스북이 왜 갑자기……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고의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고의 때문에 1분 더 드립니다.

○김현 위원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1분 드립니다. 지금 약간 잊어버리셔서 수습하시고 하십시오.

○김현 위원 진짜 잊어버렸어요, 헌터스 때문에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것 다시 보시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김현 위원 아, 생각이 났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저것 한번 띄워 보실래요, 미디어오늘에서 취임부터 파면까지 1060일, PPT.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6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의 날 행사도 불참했습니다. 축사도 보내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KBS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날리면 어떡하냐’ 이 발언에 대해서 MBC 기자 전용기에 탑승을 불허하고 헌법 수호의 일환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제가 넘기지 않겠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받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은 차고 넘치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검찰과 공수처와 권익위와 경찰이 봐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 감사담당관 계시지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는 그분께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심사 기간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예.

○위원장 최민희 그사이에 지금 저 일을 한 겁니다. 그 심사 기간 중에 주식을 가진 심사 대상자가, iMBC 주식을 가진 사람이 MBC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해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원칙적으로는 공윤법에 따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는 관여하면 안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iMBC랑 MBC가 별도 법인이라

고 판단해서 하신 걸로……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iMBC와 MBC가 관계없는 별도 회사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제가 알기로는 사장도 다르고 별도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회사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자회사·모회사 관계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이라고 한 판단이 틀렸다고 지금 감사관이 주장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답하십시오.

지금 본인은 iMBC와 MBC와 관계없는 회사라, 별도 회사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그런 판단으로 직무를 수행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대변인이세요? 국가공무원이세요.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같은 경우가 아니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국민에게 복무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 의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의결을 해서 방통위에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통보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예.

○위원장 최민희 통보받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관청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감사담당관이라면서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통보했잖아요. 그렇지요? 보냈잖아요, 이사안을. 왜 그랬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저희가 통보받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최민희 뭐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일단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무슨 말이에요? 통보라는 게 뭐예요? 알린다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공윤위에서 방통위에 그 문서를 통지해 줬는데 법원에 통지한 것까지는 거기에 적혀 있지 않고 저도 그냥 업무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방통위에 통지해 줬느냐 물었는데 왜……

제가 자료 띄워 드렸잖아요. 네 번째 자료 띄우세요.

저기 통보 내역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방통위는 모른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저희는 저 내역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일단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해 줬으니까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는 왜 한결같이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서울중앙지법의 행정처에 들어가면 있는 자료인데……

통보했지요?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왜 중앙지법으로 보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공윤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지요. 이진숙 위원장 자택 주소가 서울중앙지법……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관할 법원이라……

○**위원장 최민희** 예, 관할이라 보낸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을 공무원이 즉각즉각 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감사담당관 유석균** 기존 판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 떠오르시지요, 그런 경우가? 이건 공윤위가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법원은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방송장악 하느라고 무리를 해도 방통위 직원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R&D 예산 윤석열이 삭감할 때 되지도 않는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기부에서 저항하지 못해서 우리 과학계가 입은 타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직원 딱 한 명 있었잖아요. 잘못된 용산 지침에 대해서 저항한 공직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월급, 위원장이 주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월급 줬나?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드린 거예요. 다들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들어가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좋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겠지요?

5분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1번이십니다.

○**조인철 위원** 이진숙 위원장님, 혹시 공동체라디오 방송이라는 것 들어 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조인철 위원** 어떤 것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라디오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반경 10km인지 100km인지는, 100km는 아니고 10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에 가면 고려인마을이라고 고려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집단 거주지일 텐데요. 거기 가면 고려방송이라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거기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같이 방송을 해 줘요. 그러면 그 동네의 공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언제 없어졌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어 왔었고 2025년의 경우에도 예산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올라갔어요? 2025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어떻게 결정 났는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현재 실무자 계신가요? 지금 현재 지원 예산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지금 현재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조인철 위원** 2024년부터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2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조인철 위원** 2024년부터 한 5억 원 정도 지원되던 예산이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2억 원이 지원됐었고요.

○**조인철 위원** 2억 원이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2억 원이 지원됐었고 저희들은 올해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2억 원이 책정돼서, 올해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2026년 예산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금년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2026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저희 5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2억 정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인철 위원** 정부안에서 지금 십의 단계에 있지만 2억 원 정도 확보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그걸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2억 원이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이런 공동체라디오가 전국에 한 24곳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2억 원을 20곳으로 나누면 1000만 원쯤 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보탬이 되나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조인철 위원 그러면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이는데……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동체라디오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콘텐츠를 제작한다든가 회계를 처리한다든가 기술적으로 뭘 한다는 게 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24개 방송사들을 어떻게든……

○ 위원장대리 김현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없나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김현 시간 멈춰요. 시간 멈추고 마이크……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 위원장대리 김현 잠깐만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재정 당국하고 같이 논의하고……

○ 위원장대리 김현 잠깐만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 30초 더 주시고 답변 들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돈이 사실은 2억 원 정도, 예전에도 2억 원 정도가 지원돼서 지금 저희들이 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공동체라디오가 사실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서, 회계를 처리한다든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정도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재정 당국하고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 조인철 위원 그렇게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보면, 제 판단으로 보면 방통위에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했을 거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2억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 수준의, 예전의 2억은 거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했던 것 아닌가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라도 지금……

○ 조인철 위원 인센티브 효과, 어떻게 보면 잘하는 기업들을 치어 업(cheer up)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몇 개들은 잘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2억은 너무 적어 보이거든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철 위원 좀 노력해서 공동체라디오 방송들이 지역에서 활성화돼서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현 제가 잠깐 지금 박동주 국장님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어 가자면 그게 문재인 정부 때 20군데가 더 확대가 됐었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그것 확대가 됐는데 예산은 그 이전 예산하고 동일했던 거

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내준 것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확장을 시켰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장되기 전의 예산을 편성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윤석열 정부에서는 삭감이 됐고요.

○**위원장대리 김현** 그게 삭감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라디오가 증가된 분에 따라서……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지금 공동체라디오에, 2억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게 한 1000만 원……

○**위원장대리 김현** 10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90만 원이지요? 몇 조 시대에 공동체라디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니까 제대로 편성을 하십시오.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입장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배경훈 장관님,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던 목적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목적,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드리고 통신서비스 사업의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쉽게 말하면 통신사들 간에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 그걸 우리가 기대했던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데 단통법 폐지 당일에 번호이동이 반짝 증가하고 그 이후로 지금 감소세로 전환이 됐어요. 사실상 SKT 해킹 사태 이후에, 그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인가입자 이탈 그런 효과일 뿐이지 사실상 시장경쟁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열 경쟁 또 편중, 소외된 계층의……

○**박충권 위원** 장관님, 과열 경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보격차로 인한 소비자 차별이 부작용인 거지요, 그걸 우려하는 거고. 경쟁은 과열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SKT 해킹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통신사들 간에 상당한 고객 유치 경쟁을 하면서 가입자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이미. 이미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됐고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의 유입은 안 된 것 같단 말이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소비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공시지원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박충권 위원** 소위 성지라고 부르는 곳에서 뒤로 이렇게 주는 리베이트 방식의 혜택 말고 모든 유통점들에서 주는 공시지원금 이게 올라가야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과기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 갖고 계신가요, 시장상황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 소위 성지라고 부르는 그런 곳들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든가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아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게 작년에 우리가 단통법 폐지를 논의할 때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을 제도화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제조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모를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다 소비자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려금 자체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게 있고 이동통신사가 내는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제조사들도 많이 내야 공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박충권 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자료 제출 받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받았습니다.

○**박충권 위원** 만약에 이것 때문에 향후에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내놓는 규모가 축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 있으세요, 만약에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현재 단통법이 폐지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시니까, 제가 추후에 국감 때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상황 모니터링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 중에 지역 차별이 조항이 있는데 이게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지역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방통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

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난 7월 22일에 단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대응 TF가 구성이 돼서 통신사업자들과 제조사 그리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장에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 나이, 성별과 관련한 차별이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도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게, 어긴 것이 발견이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1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대리 김현** 예, 하세요.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정책이라든가 유통구조 이런 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를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라든가 혹은 지금 이런 구조가 복잡해져 가지고 고령자들이라든가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 없이 뒤로 위약금을 이렇게 면제해 주고 계약서에 남기지 않는 방식 혹은 페이백 방식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법규로, 법적 근거가 없지요, 처벌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계약서에 소비자와 제조사 또는 판매점에서 계약하는 그 계약서상에 위반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거기까지 하시고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이진숙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판결문 내용인데 여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그리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해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문 나왔는데요. 해임은 정당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가 현재 진행 중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도 법원이 동일하게 철회를 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 내용 보시면 ‘해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이게 2심을 가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본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정아 위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계다가 남은 류희림이 있는데 아니, 이제 런희림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런희림 위원장과 윤석열 방통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탄압용 심의에 대한 법원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지금 1심이 나온 18개의 재판에 대해서 18번 다 전패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방송장악 시도가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가 되고 소송 해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소송에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소송비용을 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방통위는 2024년에만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다 당겨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결산하실 때,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결국 불법적인 소송비용 0원으로 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하지 못하게 부대의견으로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23회계연도 결산 과방위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저희가 ‘방통위는 온전한 5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해서 3건의 소송에 대해서 4290만 원의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소송비 증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불필요한 소송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비 예산 편법 전용하지 않을 것’ 반복해서 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진숙 위원장 소송비용 불법 전용을 지적했더니 ‘소송을 자체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로펌과 건당 수백만 원이 넘는 수임 계약을 맺었는데 심지어 외상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상 계약이 가능합니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취소 사건 660만 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사건 550만 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사건 550만 원.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용납하지 않겠다 했더니 기상천외하게도 외상 계약을 합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조차 전무후무한 사상 초유의 불법 외상 계약입니다.

불법 외상 계약으로 현재까지 밀린 소송비용이 1억 450만 원입니다. 불법을 가리기 위

해서 불법을 또다시 덮어서 자행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혈세를 윤석열의 폐악을 변호하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 언제까지 방통위를 불법의 소굴로 만들 작정입니까? 언론장악, 방송탄압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련의 불법행위들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심도 지면 또 외상 계약해서 대법원에 올릴 생각입니까? 외상 계약이 위원장의 사실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압하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대답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까 김장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들이 국내 방송심의라든가 관련 소송도 있지만 사실상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소송에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5년 소송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국내외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로 자체 소송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소송 해태가 됩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 그런 빅테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이 없으면 더 큰 책임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고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이렇게 불법을 덮으라고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 요구가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 나왔었던 AI 바우처 사업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산 낭비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현장 수요에 맞춘 AI 바우처 사업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활성화 방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이랑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거 고갈 문제하고 운영 문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번 결산보고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모두 두 기금을 통합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똑같은 질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관님하고 방통위 쪽에서는 성종원 기획조정관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인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하니까.

지난해 국감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당시 한수원의 대답이 되게 교묘했습니다. 사업 수주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이득 챙기는 것은 분명히 이게 다른데 이걸 섞었다면서 오히려 과방위 위원들에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저의 걱정은 대한민국 원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전문 하청업체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을 했었던 건데, 왜 노래 가사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거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꽁꽁 감춰 두더니 이런 매국 계약, 굴욕 계약 대형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회에 오셔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네요.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장관께서는 기재부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김정관 장관님과 함께 진상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 이거 보셨듯이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짚었잖아요. 최단시간 안에 발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전에도 의견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발표를 하실 때 이번 계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이 완전 파이널 계약이라고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인지, 되돌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피해 부분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대책 마련을 지금 해 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차근차근 빼놓지 않고 해 주시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 저는 대부분 다 국정감사에서 다시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희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김영관 사무처장직대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고 PPT 띄워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순서가 갑자기 확 뛰어서 PPT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만 시간…… 스톱해 주셨군요.

○위원장 최민희 예, 5분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직대께서는 이 자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월 YTN 청문회 때 유진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유진기업 인권경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한 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방통위도 유진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그래서 YTN 청문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유진기업이 인권경영헌장을 공개했다라고 국회에 답변했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몇 문장만 읽어 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YTN을 인수한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우리는 고용에 있어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법에 따른 결사—이거는 노동조합으로의 결사입니다—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이걸 국회에 제출했어요. 아마 4월 말에 있었던 이행보고에도 이 자료가 들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통위로 제출이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노종면 위원**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런 윤리경영, 인권현장까지 선포한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말에 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났고 또 지난해 4월 중노위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당해고이니 복직시켜라. 그리고 올해 6월, 그러니까 유진기업이 4월 YTN 청문회에서 답변한 두 달 뒤에, 두 달여 뒤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본안판결이 처음 나왔지요—역시 똑같은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기관에서 또 법원에서 연거푸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면 인권현장을 선포하고 윤리경영을 약속해서 YTN 인수 자격을 획득한 기업이 이걸 수용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해야 됩니까? 복직시켜야 마땅하겠지요, 다투는 건 나중에 다투더라도? 그래도 복직을 안 시키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부릅니다, 노조탄압 기업,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 반노조 기업. 뭐 그렇게 부르는 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기업을 인권경영을 하거나 윤리경영을 한다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고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사,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뻔뻔스럽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유진기업은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노조가 언론활동을 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방해했다. 그냥 방해도 아니고요 악의적으로 방해했다.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노조 가입이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이걸 왜 확인합니까?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까지 거부해 왔다.

이런 기업이 돈을 대서 YTN을 사 갔으면 과거에 이랬더라도 앞으로는 안 해야지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인권현장이라는 걸 만들고 국회에 4월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있었던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 가운데 편성위와 관련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고 내용을 보니까 허위·왜곡 주장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 입장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편성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편성규약은 개정 전 방송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지금 규율 대상인 10개 전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편성규약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면, 편성규약이 법적 의무사항

이고 지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한 편성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개 방송사 가운데 EBS·YTN·연합뉴스TV만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편성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편성규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고 그걸 빼더라도 이미 10개사 중에 7개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허위조작정보 폐해 그리고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또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일 텐데 불용 처리되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예, 아니요’로 단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업자 빠띠 측에 플랫폼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2024년 6월에……

○이주희 위원 아시는지 모르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산 불용되었고 그렇다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고요.

○이주희 위원 단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과정에서……

○이주희 위원 찾지 못했는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편향성 시비가 있는데 민간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주희 위원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던 걸로 보이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건 결국 국가가 팩트체크를 통제·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인터넷 신뢰도 향상을 위한 팩트체크 활동 자체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 바람직합니까? ‘예, 아니요’ 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팩트체크넷 플랫폼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맹공을 퍼부어서 결국 팩트체크 사업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윤정부 들어와서는 당정 모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 것 아닙니까? ‘예, 아니요’ 답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결국 국가가 팩트체크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리박스쿨과 같이 사상과 언론을 편향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제2의 리박스쿨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혀 아닙니다.

○**이주희 위원** 12·3 내란이 벌어진 큰 원인 중 하나가 부정선거라는 혐의조작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 법원 모두 철저한 조사 끝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29%는 여전히 음모론에 동의하고 있어 혐의조작정보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선동으로 내란 촉발, 내란 응호,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어지면서 내란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 연예인들 대상의 혐의 악성 루머 피해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무한 정치적인 극단주의 선동, 혐의조작정보, 혐오 차별 콘텐츠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결국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PPT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PPT에서 보이듯이 2년 전 윤석열 정부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가짜뉴스 제도 정비와 함께 팩트체크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규제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방식의 입법추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입니다. 결국 앞서 보았듯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윤석열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엄과 같은 정치적 극단주의를 없애는 길일 것입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에서는 입맛에 맞는 팩트체크 방식만 찾지 마시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독립적인 기구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입맛에 맞는 팩트체크 사안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계획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팩트체크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한 적이 없지요.

○**김현 위원** 같은 심의센터 있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건 방심위.

○**김현 위원** 방통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방심위에서 만든 건데……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때는 이동판.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배경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5시 13분쯤 이곳 과방위 회의장에서 발생한 질의 중단 사태 기억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잠깐 노래를 잘못 트셔 가지고 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중

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흘러나온 노래 제목 혹시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목이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이정현 위원 예, 맞습니다. 골든이라는 곡이지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도 나왔던 노래인데 걸그룹 IZNA가 커버곡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원래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3명이 불렀던 노래이고요.

자, 이 노래 잠깐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함께 뮤직비디오 좀 보시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멜로디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게 되면 계속 흥얼거리게 됩니다. 가사, 뭐 영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지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내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케이팝, K-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남산타워도 나오고 K-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도 나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도 제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역시 K-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를 좀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작을 어디에서 한지 아십니까? 일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미국 넷플릭스가 맡았습니다.

소재만 한국의 문화, K-컬처인데 지식재산권과 수익은 모두 해외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케데한의 지식재산권 가치가 최대 1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수익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닙니다. 문체부와 관련된 일들이 과기정통부와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 정도 사안이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라고 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원래 과기정통부 이전에 말이지요,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창업이나 성장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라는 것을 두 부처가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 조성이 쉽지가 않아요.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2024년에 350억을 출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5년부터는 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자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 드립니다.

원래 당초 2024년에 계획했던 모펀드 조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를 넘겨주신 것 같은데?

6000억 원이 당초 목표였는데 이게 4000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펀드 결성이 자연되고 자펀드, 모펀드가 있고 또 자펀드가 있는데 자펀드의 결성도 당초에는 2024년에 계획했다가 2025년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이 자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가 있고 또 프로젝트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단 말이지요. 과기정통부에서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이걸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350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50억 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이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그런 콘텐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혼자 다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출자를 하고 그런 펀드를 구성할 때 제한 없이 충분히, 정말 경쟁력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이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펀드 조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K-콘텐츠의 주도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통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과기부의 핵심 소관인데 국내 OTT나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의지를 한번 끝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근 집중 추진하고 있는 AI 그리고 미디어 이런 결합을 통한 어떤 차별성 그리고 K-콘텐츠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어제 문체부장관과 만나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펀드 조성, 펀드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K-콘텐츠 활성이 AI 또 대한민국의 AI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저는 안 깔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진숙 위원장님, 쿠팡 관련해서 납치 광고 그게 사실 7년 동안 계속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잘 살펴봐서 개선 방안을 저희 의원실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편성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편성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보면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게끔.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시청자위원회가 탄생하고 시청자위원회가 또 이사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언론노조가 장악한 회사에서는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판을 깔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회사를 종편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SO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법을 확대해 놓고 해서 이게 사실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예요. 언론노조 일색으로, 예를 들면 일당독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렇게 처벌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편성위원회는 현재도 각 방송사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받도록 돼 있고 재허가·재승인에도 반영이 되게 돼 있어서 구성을 하지 않으면 방송사로서는 큰 손해를 보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노사동수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 사이에 다 임명하자는 건데 그 편성위원회가 결국 그렇게 되면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고 제가 아는 대부분 방송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경훈 장관님, 디지털배움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디지털 배움터가, AI 디지털배움터 이렇게 해 가지고 AI 기본역량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예산 이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AI가—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아래요—AI를 붙여서 예산을 좀 더 따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AI 역량 부족은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만 소위 기존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역량 부족을 교육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역량 부족이 되면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무더운 날씨에 택시 호출 앱을 사용 못 하는 어르신들은, 그것 하나 못 하셔 가지고 뺄뺄 흘리면서 길가에서 택시 잡느라고 서 있는 이런 장면을 한번 보시면 AI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사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PPT에 나오는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보면, 이게 작년 조사인데,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역량 수준 평균을 100이라고 그러면 55.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평균보다 낮은 거의 140%고 30대는 136%, 60대는 63.4 이렇게 나왔는데 이 디지털배움터가 아직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유의미한 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AI가 만능은 아니니까, AI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전반적인 AI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 갖고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 질의 끝나고 나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하실 건가요, 두 분? 세 분?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하고 싶지요.

○**위원장 최민희** 하세요.

○**김장겸 위원** 그러면 저도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예, 하세요.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해 오신 위원님들은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사무처장대행님 나와 주세요. 제가 이진숙 위원장한테는 질의를 안 한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해야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것은 수사 진행 중이고,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이것은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유튜브에 출연하고 SNS에 정치적 발언한 것 이것은 감사원에서 일단 주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저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위에 대해서 볼 때, 유튜브에 출연하고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감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주식처분 관련 이해충돌, 공무원 윤리 위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요구 대상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통보가 가면 방통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나요? 어떻게 절차를 밟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는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훈기 위원** 이렇게 통보가 가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해서요.

○**이훈기 위원** 아니, 거기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그렇게 됐는데 사무처장이 그것도 안챙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이훈기 위원** 아까 사퇴 이유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것 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진숙—그때 후보자지요—방통위원장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일곱 가지 얘기했어요. 그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불법 광고 영업한 이진

숙 후보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위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하면 제가 광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대전MBC 사장 하면서 골프 치면서 광고 유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지역 MBC는 광고 유치를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방송도 그렇잖아요. KOBACO를 통해서 해야 되지 불법 광고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광고 관리감독은 방통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광고 유치·판매는 KOBACO가 하고……

○**이훈기 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KOBACO가……

○**이훈기 위원** 아니,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냐고요, 관리감독이요. 방통위 소관 아니에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왜 안 하지요, 법 위반이 명확한데? 골프 치면서 광고 유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전MBC 사장 하면서, 법인카드 쓰면서.

왜 안 해요? 위원장이라 못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

○**이훈기 위원** 이진숙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장관급이면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처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서 임기를 채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무처장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상사지만. 감사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원장은 감사 못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본적으로 감사는 감사담당관의 독립적인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관심도 없잖아요, 여기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광고 영업했다고 실토를 했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을 했는데……

사무처장도 관심도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

○**이훈기 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방통위에 몇 년 계셨어요,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처음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200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방통위원회에 있었던 사무처장대행 같은 분이 그나마 방통위원회를 좀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고민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 기관들이 다 오셔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이 서면질의 목록, 서면질의로 다 올렸습니다. 참석하신 부처의 기관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서면질의 목록이 뭐 질문은 몇 개밖에 안 했습니다만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 결산을 보니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시정요구사항 유형까지 해서 부처별로 소상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다음에 결산소위에서도,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꼼꼼히 따지겠습니다만 오늘 사실 결산 상정한 날이고 결산을 따져야 되는데 다른 현안들이 많아서 못 따집니다만 서면으로 다 올렸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의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통위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원안위 위원장님, 지난번 7월 초에 제가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말씀드렸던 풍산 우라늄 공장 관련해서 잠깐…… 다른 상임위에 그게 국방부도 관련돼 있고 통일부도 관련돼 있고 또 환경부도 관련되어 있는데 관련된 공직자들을 다 모셔서 한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때 사무처장이 보니까 IAEA에 파견근무하시고……

위원장님도 IAEA 파견근무를 하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2년 동안 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IAEA 그 당시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현 위원장……

○**최형두 위원** 현 위원장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최형두 위원** 제가 지난 가을에 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당시에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디 팩토(de facto)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해서 그것을 좀 따지려고 만났더니 그분은 외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NPT 탈퇴 이후에 IAEA가 북한 원자력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할 수가 없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에 묻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원자력시설의 안전 문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우리나라도 한 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발표하고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사실은 지금 IAEA 사무총장이 걱정하는 바는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사찰을 할 수도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컨대 원전시설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나면 IAEA가 득달같이 날아오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북한은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에도 이 문제의 중대성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접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이지요.

풍산 우라늄 공장 그게 다행히, 저희들은 그 문제를 일부러 크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서해와 인천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잘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연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용히 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처음으로 국내에 큰 리마인드 효과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원자력 핵무기 관련 시설이나 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원천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또 핵무기, 여기 지금 박충권 위원이 김정은대학에서 온 대단한 ICBM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자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안 해, 백두산을 비롯해서 너무 지각을 많이 흔들어 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핵무기를 비밀리에 만들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 또 우리도 핵폐기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배출되는지 지금 IAEA의 감시망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성강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것을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통일부하고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남북 협력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우리 원전 사고 난다고 정부에 보고합니까, 원전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자면 그분들이 숨길 동인이 훨씬 크지요. 그래서 원안위가 있고 IAEA가 사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또 하세요.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 때 방송 3법이 되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어떤 의미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 3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지금 현재의 방송법으로도, 방송법을 개정할……

○김현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국무회의 참석이 이진숙 개인이 참석한 게 아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배석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이진숙의 입장이 별개일 수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그러면 후속조치 안 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후속조치는 방송 3법이……

○**김현 위원**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 안 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안 한다, 많다가 아니라 저희가……

○**김현 위원** 물어봤으니까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보고받기 전에 사무처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위원회가 완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은 ‘그것 일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진숙의 폭주,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한 마지막 국무회의의 의미입니다—‘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 3법, 방통위 안에 대해서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예.

○**김현 위원** 업무 지시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받았습니까? 무슨 내용을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에서도 방통위의 의견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지시를……

○**김현 위원** ‘업무 지시가 공식적으로 내려왔습니까’라는 취지입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시지요.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 지시 내려왔습니까? 업무 지시 공식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루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대통령 지시사항……

○**김현 위원** 위원장의 지시가 업무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방통위에게 내려오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것 없으면 업무 지시받은 거 아니지요? 위원장의 개인 지시지요? 위원장이 지시한 것과 대통령의 지시는 다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하여튼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입니다,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

○**김현 위원**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위원장에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공식적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방통위로 내려오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인설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국회에 와서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억이 안 난다, 난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무처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짓말한 적도 위인설관한 적도 없습니다.

○**김현 위원** 말장난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단어 하나에 들어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업무 지시 내린 바 없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업무 지시받았다고 하고 사무처에 업무 지시를 내리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내용을 위원장이 사적으로 오용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답변 들을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이? 지난번에 국회 열렸을 때 똑같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방통위에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있나. 어쨌든 요약하자면 없다, 공식적인 지시 없다는 답변 제가 이 자리에서 받아서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고장 난 레코드를 자꾸 트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지시 없었습니다. 제가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일 다 취재했습니다만 입에 올릴 가치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지시 없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여섯 분이네요.

그러면 추추가질의하시지 않게 7분씩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5분씩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하다가 안 쓰시면 돼요.

○**최형두 위원** 써야지요, 똑같이.

○김장겸 위원 5분만 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도…… 퇴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7분 드릴 테니 충분히 하시고 추추가질의를 하지 마시라는 취지입니다.

○노종면 위원 추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시고 빨리 끝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장겸 위원 그럼시다. 그럼시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냥 이석하셔서 화장실 다녀오시는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이나 원안위에 질의하실 분?

조금만 대기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시고 이석하시게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세요.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원안위에 대해서, 조정아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최형두 위원 내가 그날 회의하면서 IAEA랑 이 문제를 좀 소통하라고 했는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주세요.

IAEA랑 소통하라고 했는데 소통해 보셨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이 문제에 대해서 IAEA와 소통은 일단 공식적으로 외교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있고……

○최형두 위원 IAEA 보니까 외교관이 한 분 계시고 원안위 계신 분이 그때 제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만날 때 대화록을 옆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 대화록은 확인해 봤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확인해 봤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했던 말에 틀린 게 있던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아니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말씀……

○최형두 위원 라파엘 그로시가 제가 물어서 이야기한 것, 제가 뭐 다그친 것도 아닌데 라파엘 그로시 본인이 꽉 그런 걱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감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뒤로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 우리 국민의 안전 또 북한 주민의 안전 또 북한 권력자들도 핵무기를 스스로 지금 포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핵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핵물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변 국가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전 문제인 만큼 핵 버튼이야 누르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만 원자력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권력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안위가 이것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북한 영토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찰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인접한 국가인 만큼 예성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매달 보고서를 내고, 올 8월 달 것을 스스로 낸 것을 보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는 이런 것들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대로 따로 협상을 해야 되지만 원자력안전 문제는 정말 휴전선을 넘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원안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IAEA와도 계속 노력하시고 IAEA 그로시 총장에게도 지금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도 좀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IAEA는 핵무기 관련해서는 NPT 탈퇴 이후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핵물질을 둘러싼 안전관리 문제, 이로 인한 인접 국가에 대한 피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 원전 주변과 핵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직접 사찰의 범위, 안전관리의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만 육상으로 또는 공중으로 또 해상으로 가능한 감시의 범위 또 그것을 통해서 미리 사전적인 감지도 하고 해서 통일부라든가 국방부를 통해서 미리 북한 당국에게 이런 위험을 알려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앉으시지요.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조심스레 잘 관리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원전시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매번 IAEA도 갑자기 들이닥치고 하는 이유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고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괜히 상급 관청에 보고해서 혼나느니 숨기려 드는 것이 그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원안위에 제가 좀 서운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보도자료 하나 딱 보내고 명색이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인데 원안위의 누구도 와서 이것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원안위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조정아 처장, 원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저희 사무실에 뭐 하나 보낸 적 있어요? 보도자료 보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런 태도입니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최형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소위까지 열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앉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바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죄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도 되신 뒤로 우리 국회에 한번 인사한 적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제가 취임 이후에……

○최형두 위원 저희들도 바빠서 일일이 그랬습니다만 한번 원안위, 우리 원안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물어볼 게 많지만 관련된 질의 자료를 보냈으니까 결산과 함께 새로운 예산 사업에서도 저희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순서가 저예요?

○위원장대리 김현 예.

○최형두 위원 원안위 가십시오. 저는 원안위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원안위 이석해도 됩니다.

○노종면 위원 우주항공청은?

○최형두 위원 우주항공청도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우주항공청 질의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아니, 저는 없어요. 아까 확인을 안 하셔서……

○위원장대리 김현 질의 없으시면……

○최형두 위원 우주항공청도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있으십니까? 우주항공……

○김장겸 위원 예, 보내시지요. 보내시지요.

○위원장대리 김현 이석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더 있습니까? 과기부하고 방통위……

○노종면 위원 표부터 준비해 주세요, 표부터.

○ 위원장대리 김현 준비됐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종면 위원 PPT부터 띄워 놔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아까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 개정된 방송법에 들어가 있는 편성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점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편성규약은 이전부터 법적인 의무사항이었고 그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방송사도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편성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용어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에는 ‘노사동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법과 무관하게 임의 설치돼 있는 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의 규율대상은 저 10개사가 전부입니다. SO까지 규율한다는 것은 착오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모든 방송사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 10개 방송사만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이미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동수로 상당수가 임의 운영하고 있지만 법에서 강제하는 내용은 사측과 종사자들이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를 워낙에 백안시하시니까 노조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법이 없을 때도 대부분 의무 설치, 편성규약은 의무였기 때문에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었던 것을 뭐 하려 법으로 규정하는가? 법에서 방송 편성, 제작, 취재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편성규약을 두도록 했는데…… 그리고 그 편성규약을 만들 때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법에 명시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법이 하라고 하니까 규약 만들고 편성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법으로 굳이 규제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8월 12일이었던가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주장 을 했던 데 하나하나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허위와 왜곡 주장이 많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쉽게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허위·왜곡 투성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이진숙 위원장 페이스북에 시청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특정 프로그램을 아웃시키는 정도 원래 편성에서 하게 되는데 방송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멋대로 하게 되면 PD, 작가, 진행자 등 프로그램에 딸린 인력이 직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것 못 하게 하려고 편성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겁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개편이 이

루어지지요. 어떻게? 기존 방송법에 의해서도 자율적으로, 제작자율성·편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사장의 일방적인 지시 등에 의해서 술하게 프로그램들의 존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를 두어서 방송법이 원래 규정하던 대로 제작자들의 판단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제 권한이 편성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권한이라는 표현 앞에 편성 개편 등의 기존 방송 조직 내에 있는 권한들을 언급해 놨습니다. 편성 개편 권한도 문제지만 그 이외에 경영본부장의 권한, 기술본부장의 권한 등등 편성위원회와 무관할 수 있는 권한들도, 경영 권한들이 다 침해된다고 썼어요. 중요한 업무가 편성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원회의 등에서 결정하던 것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성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결정을 못 하도록……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언급한 제작본부장, 그 본부에서 제작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에 경영진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부당한 경영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도 방송 편성과 관련해서. 그런데 마치 이 위원회가 편성 개편을 주도하고 위원회가 실무를 관장하고 이런 것처럼 호도해 놨어요.

제가 웬만하면 과한 표현을 안 쓰려고 지금 망상이라는 가장 적확한 표현의 대체어를 찾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주 헛된 생각이에요.

다음, 방송법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등등의 징벌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예, 기존에는 과태료였는데 강화한 것이 맞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안 따라가니까, 제대로 안 지키니까.

다음 부분은,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이 맞기는 한가? 편성위원회 구성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까지 반영하도록 한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현실을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언론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노동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노동권력이라는 표현에서 어김없는 노동 적대 시각, 반노조 관점 이게 보입니다. 언제쯤 노조로부터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지 참……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어둠 속에서 죽여 왔지요. 그것 못 하게 하려고 방송법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다음으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국제협력 글로벌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R&D 강화를 위한 해외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의 중심에 협력센터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기협력센터가 있고 글로벌 혁신센터도 있고 해외 거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지난해 2024년도를 보니까 미국, 중국, EU 등에서 대략 85억 8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제 질문 잘 들어 보십시오.

85억 8500만 원 투입됐으면 이 예산 역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85억 8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의 해외 거점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8개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외 IT 지원센터,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출연연 소속의 해외센터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32곳이 있습니다. 32곳이 있고요 이 예산이 273억 24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개선 필요성들이 한 서너 가지가 지적이 됩니다.

첫 번째, 업무 중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비슷한 업무들을 소규모 인력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파견 인력이 거의 한 자릿수, 한 곳의 협력센터 보니까 평균 한 4.8명, 너덧 명 정도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뭔가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업무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고 중국 베이징, 벨기에 브뤼셀 등 특정 지역에 중복으로 이 협력센터들이 소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은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정보 파악하고 이런 일들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외 협력센터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곳에는 좀 더 많은 인력들이 파견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KIST 유럽연구소에 27명이 있고요. 한·인도협력센터 13명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덧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동연구 지원이라든지 현지 동향 파악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통합 조정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장급들을 파견한다거나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나 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센터는 세계 선진 과학기술들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또 그 기술들을 흡수하고 국내외 기술진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기술선도국가에도 나가야 되고 또 경쟁국가에도 나가서 중복되는 일들이 아니라 차별화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을 더 준비했는데……

장관님 혹시 국립과학관 가 본 적 있으세요?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임명되기 전에 가 본 적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립과천과학관이 성과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국립과천과학관 성과지표를 보니까 방문하는 이용자 수 등을 확인해 보니까 2021년에 102.1% 달성, 2022년 112.5%, 2023년에는 92.3이었는데 2024년에는 101.4%. 대부분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가 보니까 이 달성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원래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파악해 보면 사업별 추진실적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보고해야 되고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나 목표치를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측정 방법이나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다음 PPT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여기에 2022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온라인 콘텐츠 이용객을 포함시켜 베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온라인 콘텐츠 이용객이 2023년에 83만 1539명, 실제로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은 1만 7138명인데 2024년도 역시 온라인 콘텐츠 이용객 59만 9000여 명을 포함시켜 베립니다.

이렇게 성과계획서에는 당초 명시되지 않은 온라인 콘텐츠 이용객을 포함시키면서 목표치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콘텐츠 이용객 수를 제외하고 저희가 다시 성과지표를 계산해 보니까 2023년의 목표치 달성은 60.4%, 2024년에는 76.0%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정현 위원** 장관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PPT 하나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실적을 부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그 전에 99.9, 95.4—12.3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에는 많이 떨어졌지요. 2023년, 2024년은 90.2%, 88.6%.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과기부의 성과보고서에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는 과학관. 과학교육과 문화행사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과학관을 만들겠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실적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부풀리지는 않았지만 성과에 한참 미달 돼 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는 과학관과 또 과학교육과 문화행사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과학관을 목표한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코로나 때 줄어든 이용객 수를 좀 회복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이용자보다는, 회복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사실 이용 콘텐츠, 과학관들의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리뉴얼 부분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과학관을 통해서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학관 문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과학기술부에서 미리 과학관 문제를 좀 살펴보시고 지난해 지적됐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미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방통위 사무처장대행님 잠깐 나오세요.

○**김장겸 위원** 저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현** 안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셔 가지고……

○**김장겸 위원** 아니아니, 한다고 그랬어요.

○**이훈기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하시지요.

○**김장겸 위원** 먼저 하고 빨리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이진숙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노사동수, 노사동수가 아니고 사 측과 종사자의 동수다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중에 편성위원회가 이사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에서는 사실상 그 장악을 가속화시켜 가지고 또 다른 이사회, 왜냐하면 심의·의결권을 못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공영방송이라면 어떤 내적 다원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론노조 성명을 보면 ‘보수 궤멸’하면서 보수를 거의 철천지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같이 근무할 때 보면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라고 언론 노보를 통해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데 이게 과연 소위 언론 자유, 방송 자유를 위해서 바른 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지금 사 측과 종사자 측이 5 대 5의 비율로 구성이 된다,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밝혔지만 경영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

이 되면, 지금 현재도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측이 노측의 또는 종사자 측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한다,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동수로 구성이 되고 의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구성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노사 또는 사측과 종사자가 동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종사자가 비토권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김장겸 위원 그것 당연하지요. 그 뜻대로, 종사자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아니지만 노조가 대표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럴 경우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도 사실상 주요 회사들은 인사권을 언론노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동의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권 내주고 인사권 내주고. 아니, 그러면 책임만 경영진이 지고……

아니, 경영 실패, 편성 실패, 노조위원장이 책임지고 나가는 것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겸 위원 정진기금, 방발기금 잠깐 제가 좀 질의하다가 아까 어느 차관님이 답변하셨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장겸 위원 PPT 보시면, 이진숙 위원장님도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방발기금 이런 것을 보면 2019년까지는 공자기금 예탁 잔액이 총 한 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두 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차입 없이 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사업비를 크게 늘렸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기준 6000억 원의 공자기금 예탁 잔액이 없어지고 대신 없었던 6335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환을 통해서 소폭 줄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빚을 내서라도 확장 재정을 하겠다, 비서실장이 그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2020년 문재인 정권의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이게 좀 궁금해요. 총 기금액 이게 얼마나?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떤가? 이것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이것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탕진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로벌 플랫폼이나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방송통신업계에서 굉장히 큰데 이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사실 방송사보다 OTT가 지금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더 크지요,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렇지 않아도 방송광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방송사에

서 내는 방송발전기금 이게 방송사들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3% 안팎으로 지금 그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의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서 OTT에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김수키 해킹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해킹 전문지 프랙이 공개한 건데……

배경훈 장관님, 이 보고서를 보면 이게 사실 지난번에 SKT 해킹 사고 배후로 의심을 받았던 중국 기업 아이순이 협력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것 혹시 이야기 들은 바 있어요? 혹시 차관님들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사에 중국 해킹그룹의 협력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확인된 그런 사실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STK도 한번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방통위 사무처장대행님 좀 나와 주세요.

사무처장님, 지상파UHD 편성 비율 올해부터 50%예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올해 50%가 됐어요, 2020년에 20%로 시작해서.

국내 방송사들이 50%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UHD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됐어요.

EBS는 지금 UHD 편성 비율이 몇 %예요, 지상파 EBS?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이훈기 위원 EBS는 UHD 편성 비율이 0%예요, KBS하고 송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까 검토보고할 때 EBS 예산 문제를 얘기했어요. EBS 송출 비용이 3억 3900인가 불용됐어요. 그래서 UHD에 대한 문제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가 EBS 문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 50% 편성 비율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EBS는 심지어 0%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예산도 못 쓰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UHD를, 그동안 국내 방송사에서 UHD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으로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수백억 이상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수백억이 아니고 2조 2000억을 썼어요, 지금. 국내 지상파방송이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편성 비율 50%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써야 되는지 알아요? 2조 2000억을 썼는데 수백억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황당하네요, 방통위 수준이. 그리고 무슨 정책을 검토해요? 이진숙 위원장 질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뭐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2조 2000억을 썼는데 직접 지상파로 수신할 수 있는 비율은 1%에서 2%예요. 이 정책은 거의 폐기해야 될 수준이에요. UHD는 뭐냐 하면 초고화질 TV, 어떻게 보면 가전사들이 TV만 팔아먹고 이 정책은 거의 폐기해야 되는 정책이 돼버렸어요. 가전사들 TV 팔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정확히 보면.

그리고 지금 AM라디오 거의 안 듣지요? AM 지금 표준FM으로 다 대체됐어요. AM 폐국해야 돼요. 그리고 AM이 송신소가 수만 평의 부지를 차지해요. 도심에 보면 넓은 부지에 안테나 하나 있는 게 다 AM 송신소예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아요, 그런 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KBS를 제외한 대부분 방송사의 AM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상파 DMB, 지금 스마트폰 단종돼서 지상파 DMB도 휴대폰으로 수신이 불가능해요. 지금 AM하고 DMB 폐국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의 AM은 대부분 다 폐국을 했고요. KBS의 경우도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훈기 위원** DMB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DMB 같은 경우도 지금 연구반을 구성해서 하여튼 올해 새로……

○**이훈기 위원** 지금 DMB도 여기 장비도 없고 다 단종돼 가지고 재허가받을 때 빌려다 재허가를 받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정책을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AM하고 DMB는 폐지를 해야 돼요, 폐국하고.

그리고 UHD, 저 아까 충격적인데 2조 2000억 들었는데 수백억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UHD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말씀을 주셨고 올해 새로 UHD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훈기 위원** 아니, 저는 방통위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런 UHD 정책을 펴고 있고 방통위원회에서 UHD 편성 비율에 대해서 재허가에 큰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 부담으로 방송사들은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콘텐츠 제작비용도 쓰고. 그런데 방치하고 있고 기껏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그동안 수백억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송사들은 죽어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방송사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EBS 예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UHD하고 AM하고 DMB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좀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배경훈 장관님, 아까 KT 얘기했잖아요. 잠깐이라도 어떻게 하실지 고민 좀 해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 KT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답답한 거는 고용노동부도 대통령이 얘기해서 산재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고 열심히 장관님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신경을 못 쓰세요. 그리고 사실 또 과기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과기부는 아예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KT는 전에도 수십 명이 자살했어요. 그런 대기업이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각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서 사각지대에 있는데 저는 KT 노동자들을 가끔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도 저번에 제가 만났더니, 산재에 대한 판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정신적 산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현대차가 1대 주주로 들어오고 대표이사가 구조조정 한다고 그럴 때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말 그 구조조정이 AI에 관련된 인력 재배치면 존중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인력 배치를 해 갖고 멀쩡한 기술직들을 영업하라고 모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거는 진정성을 갖고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배경훈 장관님,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이 보증기간이 2년이고요, 태블릿 PC가 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AI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도 상용화가 넓어졌는데 이 보증기간의 기간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혹시 과기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조사에서 보증기간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새로 임명된 만큼 제조사와 관계 부처 등과 추가 협의해서……

○김현 위원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해와 올해는 어쨌든 대단히 다른 조건이기도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다시 직접 얘기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민생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연한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2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제조사의 의견도 있고 보험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24년도까지 나왔던 그런 의견과 또 달라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검토하고 또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면 중립의 의무를 혹시 준수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인 누군가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을 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장관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문제가 있지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국회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님은 고칠 의향이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이 탄핵 당했을 때……

○**김현 위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하루를……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1.5일을 근무했는데 탄핵을 할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에서 했다……

○**김현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왜 SNS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생각이 아닌데,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SNS를 가급적 지양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이 아닐 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국가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김현 위원도 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소셜미디어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세우시고요.

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인이다. 지금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라니까

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배면 그것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김현 위원**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에 실려 있던 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엊드려서 책 보지 말라고 해도 그것 고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지만 제가 그냥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이유는, 어떻게 고치겠어요, 마흔이 지나서 우리가 가진 습관을. 그런데 그 습관이 개인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도 좋은데 여기는 국회이고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역공하라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투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맞장구치시면서 고분고분 사근사근 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끼어들어서 역공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질의하시면 답변하십시오.

다시 시작할까요?

○**김현 위원** 저 발언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6월 27일 날. 그때 2023년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제가 있어서 하루 전날 연차를 내고 봉화마을에 갔고 봉화마을에 갔던 소회를 두 줄에 걸쳐서 페이스북에 올린 걸 가지고 지금 비유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참, 체면을 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정치행위가 같습니까?

아무리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해도 보수 진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그 서거를 추모하는 자리에 간 것을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스스로 추락하지 말길 바랍니다. 품위,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지위를 갖고 계실 때는 그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직원들의 낯을 붉히게 하는 그런 행위는 삼가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애도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무처장님, 혹시 제가 발의한 법안 위원장에게 전문으로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직접……

○**김현 위원** 아니,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뒤에 국장, 방송정책국장님, 박동주 국장님, 혹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저는 보고……

○**김현 위원** 그러면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요, 본인이 찾아 가지고 출력해서 보지 않았다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크게 방통위 구조 틀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거취를,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피해의식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에 전체 방송사를 다 모아서 통신 융합시대에 맞추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유료방송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이원화시켜서 방송사들이 방통위와 과기부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방심위에서 하는 방송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방송통신

위원회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규제도 하고 진행도 하기 위함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기부 장관께, 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AI 3대 강국을 실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많은 걸 걸고 들어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긴장감이 제가 몇 번 당정협의하면서 느껴지는 게 다른 부처에서 별로 긴장감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과기부장관께서 그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소위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기본 인프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얘기하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AI 고속도로, 지금 그렇게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사실 우리가 제조업 강중국 혹은 제조업 강국, 지금까지 유지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망 이게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도 사실은 과기부장관님은 관심 가지셔야지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AI 고속도로라는 말을 요새 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 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AI 고속도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 고속도로가 뭐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경부고속도로가 어쨌든 전체 우리나라 망,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그리고 전체 우리 국토를 연결하는 이런 고속도로의 의미라면 AI 고속도로도 하나의 전체 인프라로 많은 기업들, 스타트업, 학계에서 누구나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속에 AI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개념이 하이퍼 커넥티드(hyper connected)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하이퍼 커넥티드를 AI를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존의 초연결 사회의 어떤 핵심 콘셉트가 사실 AI로 더 추가가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 AI를 기본으로 한 개발 환경, 서비스, 전체 생태계를 말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AI가 접목됐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더 똑똑하고, 그렇지요? 그 당시에 얘기된 것보다 더 지능이 높고 그리고 더 정확한 그런 개념이 접목되는 거지요, 빠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존에 우리가 ICT 정보통신 강국이었는데 그 ICT 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ICT 기반 위에 AI가 또 올라가고 그 AI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모든 서비스와 그런 시장 자체가 AI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깔고 있는 초고속인터넷망, 그 초고속인터넷망이 AI 통신이나 양자통신이나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연산 처리 방식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의 GPU를 사용하게 되고 그 GPU를 여러 대를 병렬 처리로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연산 방식에서의 한계점들이 있고 실제 전력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I 시대를 우리가 전환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GPU로 AI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런 퀀텀 컴퓨팅 같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정보통신 보안에 있어서도 AI 혹은 양자보안 시스템을 곧 빠른 시일에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서 같이 쓰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까지는 사실은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는 게 AI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데이터 그리고 기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역량, 이제 한국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이 안 되고 시장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제가 질문드린 기술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네트워크 차원에서 무선망 또 유선의 백본망 또 위성망 이런 것들이 현재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에서 더 지능화돼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요.

지금 네트워크에서도 충분히 소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네트워크 요소에서 디지털 AI 인프라로서 GPU 컴퓨팅 센터가 집중적으로 추가되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도 더 AI 베이스드로 지능화되는 그런 단계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

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약간 편트가 안 맞는데요.

저하고 지금 눈 마주친, 차관님 뒤에……

제가 그것 여쭤봤지요, 오늘 아침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실장 송상훈 예.

○위원장 최민희 이것 어제 정태호 간사가 물어본 거잖아요. 저는 되게 간단한 것을 물은 거고, 두 분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간단한 것을 물은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실장 송상훈 예.

○위원장 최민희 그것 답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실장 송상훈 어제 아침에 말씀 주셨던 것은 기존의 광케이블망을 가지고 현재 AI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셨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일단 현재 광케이블로 현재 수준의 AI 서비스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고민을 안겨 주냐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고도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것도 같이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게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수준 얘기 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같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가 다 깔리는 데도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조금 빨리 되는 것도 있겠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AI 고속도로가 많은 것을 포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도 단계적으로 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실장 송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길게 보면 결국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광케이블을 고도화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데는 과거부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정부 부처 장관이나 다 만나 봐도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데가 과거부뿐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실장 송상훈 예.

○위원장 최민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최형두 위원, 최수진 위원, 황정아 위원, 최민희 위원, 이상휘 위원, 박정훈 위원, 이훈기 위원, 이주희 위원, 이해민 위원, 한민수 위원, 박충권 위원, 김현 위원, 김장겸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빠진 분 안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종면 위원께서 아까 요구하신 천안기업 자료 왔습니까? 자료 왔나요? YTN에 요청해서 즉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왔나요?

어쨌든 지금 리스트를……

○**노종면 위원** 아직 안 왔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직 안 왔지요? 그런데 리스트를 조금 늦게 줘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YTN 쪽에서 천안기업에서 받아야 될 자료를 좀 구체화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노종면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거지요?

이것 빨리 받아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내일 오후에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하여 혹시 지켜보고 계실 기자님들이 계신다면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우영 김장겸 김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출장 위원(1인)**

신성범

○**청가 위원(1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영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전파정책국장직무대리 김경우
과학기술정책국장 강상욱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서경춘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국제협력관 황성훈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대변인 조선학
감사관 김정기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해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정창립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권석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한형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존리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우주항공산업국장 한창현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인공위성부문장 김진희
우주과학탐사부문장 강경인
항공혁신부문장 김현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이상 3건 7월 11일 회부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2)

이상 3건 7월 14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5)

7월 18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이상 2건 7월 21일 회부됨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이상 3건 7월 2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0)

7월 28일 회부됨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7. 28.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5)

이상 5건 7월 29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7)

이상 2건 7월 30일 회부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7)

이상 2건 8월 4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4)

8월 7일 회부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2)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2)

이상 2건 8월 1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9)

이상 2건 8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025. 7. 1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0)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6.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8)

7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2025. 7. 29.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7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9)

8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

8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항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8월 18일 의견 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2025. 7. 10. 정규준 외 52,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2)

7월 11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5652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673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674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651호	우편법 시행령	우정사업본부
부령	제15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53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5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